

〈최종보고서〉

관악구 먹거리계획 수립방안 및 입법정책 과제 연구

2023. 12. 20


(주)가치경영원

제출문

관악구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관악구 먹거리계획 수립방안 및 입법정책 과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2. 20

- 연구기관 : (주) 가치경영원
- 책임연구원 : 김선희(가치경영원 수석컨설턴트)
- 연구원 : 강상원(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이재효(서울시립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수석연구원)
한태식(가치경영원 수석컨설턴트)
- 내부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이종윤 의원(대표의원), 표태룡 의원(간사), 김연옥 의원
위성경 의원, 임창빈 의원, 장동식 의원, 장현수 의원
- 외부자문위원 길 청순 (농업네트워크 이사장)
정 기수 (국민농업포럼 이사)

< 목 차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3
- 2. 연구범위 6
- 3. 연구방법 8

II. 먹거리 개념 및 먹거리 정책의 필요성

- 1. 먹거리 및 먹거리 기본권의 정의 9
- 2. 먹거리 위기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 12
- 3. 먹거리 보장 현황 및 정책 전환 16
- 4. 먹거리 정책의 추진 필요성 25

III. 지역먹거리계획의 의의 및 국내외 추진사례 분석

- 1. 지역먹거리계획의 의의 및 수립 배경 29
- 2. 국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사례 42
- 3. 해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사례 60
- 4. 지역먹거리계획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88

IV. 관악구 지역 먹거리 환경 분석

- 1. 관악구 먹거리 환경분석 개요 73
- 2. 관악구의 인구 및 경제 현황 74
- 3. 관악구 먹거리 생산기반 현황 87
- 4. 관악구 먹거리 소비 현황 96
- 5. 관악구 먹거리 안정성 및 복지 현황 100
- 6. 관악구 먹거리 정책 현황 112
- 7. 표적집단면접(FGI) 조사결과 117

V. 관악구 먹거리 정책 제안

1. 관악구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121
2. 관악구 먹거리 실태조사 추진	125
3.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강화	126
4. 도시농업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	128
5. 도농간 협력사업 및 시민교육확대	129
참고문헌	13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대외 여건 :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글로벌 리스크

- 세계경제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겪으면서 3%대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됨.
 -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인류는 지속가능성 자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물질, 금융자본 중심이 아닌 ‘사회속의 경제, 경제속의 자본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서울특별시, 2019)
- 세계경제포럼(2022)은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10대 글로벌 리스크 중 기후변화 대응 실패, 극심한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붕괴, 천연자원 위기, 환경파괴의 위험을 상위권에 둠
- 2015년 국제연합(UN)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등 먹거리 관련 의제가 포함됨
 - UN의 발표 이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먹거리전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먹거리를 통해 사회 경제 환경적 이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서울특별시, 2019)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수출 제한 조치 강화, 이상기후 현상의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경제 환경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가격과 수급에 악영향을 주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는 먹거리 전략과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관점에서 환경, 로컬푸드, 공급체인 재편 등의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 2016년 영국 버밍햄 먹거리위원회(Birmingham Food Council)은 인구증가, 기후 변화 및 농업생산, 기아, 토양 영양화, 해양 먹거리, 육류소비, 깨끗한 물 등 7 가지 요인의 변화를 먹거리와 연계하여 분석

□ 특히, 2015년 밀라노 국제엑스포에서 체결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Milano Urban Food Policy Pact)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나. 국내 여건 : 먹거리 이슈

□ 우리나라는 먹거리 취약인구 비율, 비만율, 식량자급률, 농업생산 여건 등 먹거리 관련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농산물 생산환경의 악화와 먹거리의 불안전성은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 먹거리 보장 :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식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25.5%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연령과 소득 간 영양 격차 : 1인 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은 모든 식품군에서 부적절 섭취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20~30대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부적절 섭취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혼밥 비율 : 혼밥 빈도가 2년 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령자나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식품군별 영양소 부적절 섭취의 원인)
- 좋은 먹거리 관심도 : 관심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행복도가 높음(낮은 대상은 남성, 청년, 1인 가구, 학생)
- 공동체형 식당에 대한 의향 :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동식당과 복지형 공동식당에 대한 욕구가 큼

- 시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써 먹거리 기본권 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먹거리 관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짐
- 이에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먹거리의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정부는 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의식을 촉구함
 - 기본법에서는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는 2017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의 확립과 먹거리보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 과 이어서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30’ 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도시농업, 포용도시, 1인 가구 등 먹거리와 연계한 다양한 영역의 계획을 추진 중임
- 이 연구는 먹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악구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즉, 관악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방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대내외적 상황에 적합한 입법정책적 먹거리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역내 먹거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관악구가 추진해 온 먹거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나. 시간적 범위

- 2023년 현재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먹거리 환경과 실태, 주민 수요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악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먹거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다. 내용적 범위

- 먹거리 개념 및 먹거리 정책의 필요성
 - 먹거리 및 먹거리 기본권의 정의
 - 먹거리 위기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
 - 먹거리 보장 현황 및 정책 전환
 - 먹거리 정책의 추진 필요성

- 지역먹거리계획의 의의 및 국내·외 추진사례 분석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배경
 - 국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사례
 - 해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사례
 - 지역먹거리계획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 관악구 먹거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환경분석과 추진방향

- 공공기관의 추진체계 마련 및 거버넌스 운영
- 도시농업 및 학교텃밭 확대
- 먹거리 안전성 관리 및 먹거리 취약인구 감축
- 로컬푸드 공급 및 직매장·장터 운영 현황
- 생산자 및 소비자 소통 사업 및 시민교육 등
- 먹거리 추진주체 등 포커스그룹 조사(FGI)

□ 먹거리계획 수행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먹거리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
- 먹거리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 시민건강 먹거리 보장 정책의 확산
-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구축
- 도시와 농촌 간 교류와 상생 및 생산자-소비자 참여
- 통합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 선행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전문지 등) 등 문헌조사를 통해 먹거리와 먹거리 정의,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보장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고찰과 함께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나. 사례조사

- 국내외 먹거리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관악구 먹거리 계획의 추진 방향과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다. 표적집단조사(FGI)

- 관악구 먹거리 보장 실태, 먹거리 정책 및 자원체계, 먹거리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먹거리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 실시

II. 먹거리 개념 및 먹거리 정책의 필요성

1. 먹거리 및 먹거리 기본권의 정의

가. 먹거리의 개념 및 정의

□ 먹거리는 식품, 농·수·축산물, 음식을 포함하는 개념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제3조 제2호에서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로 정의함
 -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등 타 지자체 조례에서도 유사하게 정의함
- 이상의 조례들에 따르면, 먹거리는 “식품, 농·수·축산물, 음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 먹거리는 단순히 식량 공급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식품안전은 물론 건강·영양, 복지, 환경 등 농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주체·영역들이 연관되면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나.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의 개념 및 정의

□ 먹거리 기본권은 국제법적 선언

- 세계인권선언(1948)과 국제인권규약(1966)에 포함된 국제법적 선언임
-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후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 수준, 실현 방법, 국가 역할 등에 대한 해석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화(CESCR, 1999)

- 유엔 인권기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는 ‘적절한’ 먹거리 기본권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적절한 먹거리 및 그것의 확보 수단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해석(제6조)
- CESCR은 먹거리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먹거리 기본권의 핵심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제7조), 이를 존중, 보호, 충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도 명시(제15조)
- 이외에도 특정한 문화와의 부합성,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여타 인권들과 충돌하지 않는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제8조), 기업 영리행위 규정(제20조), 먹거리 체계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마련(제25조), 여성권리 보호(제26조), 식량 원조시 현지 주민의 먹거리 자급상태 회복(제39조) 등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관한 원칙을 규정
- 국제적으로 선언될 당시에는 먹거리 기본권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보장하는 정도에서 다루어졌지만, 지금은 사회·경제·문화·기후·생태·기타 조건에 적절하게 부합해야 하는 의미로 확장(조효제, 2013)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먹거리 기본권’ 개념 주창

- 서울시는 2017년 6월 전국 최초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주창함
-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2017.6.20.)’ 을 함

<표 2-1>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 내용

1.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모든 시민, 특히 경제적 취약층과 건강 취약층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급식 분야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서울시민, 나아가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식량 보장을 위해서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중소 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 상생형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 보건.복지.고용.주택.도시 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을 통하여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 먹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 먹거리는 개인과 집단, 사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서울시민의 음식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서울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 지속 가능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가치를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협치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조례에서는 ‘차별 없이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로 정의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3조 제2호에서 먹거리 기본권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로 정의함
 -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등에서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음
-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로 정의하고 있음
 -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기도는 자체 생산자가 거의 없는 서울시 보다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의가 더 구체적인 편임

-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등의 조례에서는 경기도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음
-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은 “먹거리를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로 볼 수 있음
-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 특징

2. 먹거리 위기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

가. 먹거리 위기의 정의

□ 최근 식품 안전과 식량안보를 넘어서 접근성 개념까지 고려

- 그간 먹거리 위기는 과학기술 발달로 야기된 농업생산 방식의 변화로 말미암은 안정적인 먹거리 재생산의 위기와 먹거리 안전성의 위기를 일컫거나(박민선, 2009)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식량 부족이나 기아와 연결된 개념으로 해석(송원 규·윤병선, 2012; 김철규 외, 2012)
- 그러나 최근 식품안전과 식량안보의 개념을 넘어서 접근성의 개념까지 고려한 먹거리 위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현재 시점의 세계의 먹거리 위기는 국가 간 장기분쟁과 같은 갈등 및 불안정 상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그리고 폭우, 홍수, 허리케인 등의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유발되며, 난민과 빈곤층의 발생, 시장과 무역의 타격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상황, 식품 구매력 감소 등의 먹거리 위기 상황과 연관됨(The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2021)

□ 먹거리 위기는 ‘식품불안정 상태, 식품 미보장 상황’ 을 의미

- 식품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거나 수입된 식품이 유통·분배체계를 거쳐 소비되고 최종적으로 이용되는 먹거리 체계의 전 단계로부터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

품을 사회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나 상황을 의미(김성아 외, 2022: 319)

- 단순히 식품의 양적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질, 접근성 등에 대한 다면적 개념으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이용성(utilization)을 포함한 개념
- 먹거리 위기의 해결은 식품안정의 달성, 식품 보장과 동일한 개념
 - 식품 섭취 상태나 영양 상태와 같이 단지 개인 수준의 식품의 이용성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 지역, 국가 수준에서의 식품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가용한 식품 확보 문제 등과 같은 식품의 접근성 측면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김기량 외, 2009)

나. 먹거리 위기의 유형

□ 먹거리가 순환되는 체계에 따른 먹거리 위기의 유형 분류

- 먹거리가 순환되는 체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위기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국제, 국가, 지역사회, 가구 등 다차원적 수준별로 식품의 공급, 분배, 소비의 여러 단계에서 각각 먹거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요인들을 파악 가능
- 김성아 외(2022)는 식품의 공급, 분배, 소비 단계로 이어지는 먹거리 체계(Food System)와 식품보장의 구성요소인 식품의 가용성,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먹거리 위기의 유형을 <표 2-2>와 같이 분류함
 - (식품 공급 위기) 먹거리의 생산과 수입 등 공급 단계와 관련된 위기 상황이며, 국제적, 전국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공급망의 문제로서 식품 가격, 생산비, 수입·수출 요인과 관련이 있음
 - (식품 분배 위기) 생산 이후의 유통과 분배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식품상점이나 식당 등에 대한 지리적, 물리적,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

- (식품 소비 위기) 최종적으로 식품의 획득단계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소득수준 악화로 식품 구매력이 저하되어 식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음
- (식품 안전 위기) 공급, 분배, 소비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며, 식품오염, 식품사고 등으로 인해 식품의 가용성과 이용성이 하락하는 상황을 의미

<표 2-2> 먹거리 위기의 유형

분류	식품 공급 위기	식품 분배 위기	식품 소비 위기	식품 안전 위기
먹거리 체계 단계	국제적·전국적 수준	지역사회 수준	가구 수준	전 수준
	생산과 수입	유통과 분배	구매와 섭취	공급.분배.소비
추구 방향	식품의 원활한 생산과 수입	식품의 원활한 분배	식품의 원활한 획득과 섭취	식품의 원활한 획득과 섭취
먹거리 위기 유발 요인	식품의 가용성 ¹⁾ 저하	지리적 접근성 ²⁾ 저하 물리적 접근성 ²⁾ 저하 디지털 접근성 ²⁾ 저하	경제적 접근성 ²⁾ 저하 식품의 이용성 ³⁾ 저하	식품의 가용성 ¹⁾ 저하 식품의 이용성 ³⁾ 저하
상황	식품 수입.수출 제한, 수입국가의 다변화, 국제 식품 가격 상승, 외국인 노동자 수급 곤란 등 식품 생산비 상승에 따라 먹거리 가격 상승	지리적 접근성: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식품 상점 및 식당 부족, 교통수단 미비 - 물리적 접근성: 비대면 체계로 전환 (대면 급식의 비대면 전환) 디지털 접근성: 온라인 플랫폼 활용(배달 주문) 곤란	경제적 접근성: 경제적 상황 악화·실업·소득수준 감소 등 식품구매력 저하	식품 (오염) 사고 발생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주체	식품공급망	식품상점, 식당	식품, 음식	식품공급망, 식품상점, 식품 등
주요어	식품 가격, 생산비, 수입·수출	지리적·디지털 접근성, 비대면	경제적 접근성, 소득, 식품구매력	식품오염, 식품사고

주 : 1)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의 물리적 존재를 의미. 국내 생산 혹은 수출 등 식품 공급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질과 충분한 양의 식품의 존재

2) 식품을 획득하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식품 구매와 획득을 위한 재정적 자원, 적절한 식품 가격, 교통수단 및 신체적 능력, 사회적 지지(식품 획득, 구매,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

3) 획득한 식품을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충분한 식사로 만들어서, 섭취하고 소화하여 생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출처 : 김성아 외(2022), p.319.

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

□ 글로벌 푸드 체계 극복을 위한 먹거리 지역화 전략 필요

- 글로벌 푸드 체계 하에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및 건강권 보장이 원천적으로 어렵고, 농업과 지역유지의 근간이 되는 다수가족 소농의 급속한 해체 또한 막을 수 없음
-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의해 우리 농업의 가족·소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쟁에서 소외, 먹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 확대로 이어짐
-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농업 영위, 종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통 식문화 계승, 탄소중립·지구온난화 방지 등 문제 해결 시급

□ 지역 단위 푸드플랜이 지역 활력화의 주요 의제로 부상

- 지역 단위 푸드플랜은 시민의 건강한 밥상 보장,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실현, 선순환 지역경제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책수단으로 국내외에서 지역 활력화의 주요 의제로 부상
-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정의, 공공재로서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출발점
-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순환을 일원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경제 모두에 이로운 먹거리 체계로의 대전환 필요
- 특히 2015년 밀라노 도시 먹거리 협약을 계기로 세계적 선진도시의 요건으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시행정의 먹거리 공공정책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이의 실행이 중요한 과제로 이해되고 있음

□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 가능

- 푸드플랜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의 확장(일자리, 청년, 귀농), 가족소농 재생산, 순환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3. 먹거리 보장 현황 및 정책 전환

가.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의 의의

□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 실현을 위한 국제적, 국가적, 또는 사회적 개입 전략과 실천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

- 197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처음 논의 당시 농업생산량의 증대, 세계화된 식량 체계의 구축과 확산,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상의 원조를 통한 저개발 국가의 기아 종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김소연·김순영, 2019:131)
- FAO 총회 이후 1980년대에는 양적 접근성을 1990년대에는 질적 접근성을 강조하거나 추가함(김기량·김미경·신영전, 2008)
- 1996년에 열린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음식과 식품 기호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있는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김소연·김순영, 2019:132)
 - 먹거리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인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은 섭취하는 음식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영양, 안전성 등 질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먹거리 미보장(food insecurity)의 원인이 식량 생산의 절대량이 아닌 분배와 접근성의 제한 때문이라는 인식이 꾸준히 제기

□ 먹거리 보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음
 - 먹거리 절대량의 충족과 함께 먹거리 접근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먹거리 보장의 제도화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가능
- 먹거리 위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 주의자와 생태주의자 간 인식의 차이가 큼

- 먹거리 위기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사회적 위험이며, 먹거리에 대한 양적 욕구와 질적 욕구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의 해소와 욕구의 충족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매우 필요하며, 정책의 목표 효율성도 높을 것임
-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 먹거리 복지는 일반 시민에게 먹거리 품질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것과 빈곤 및 취약 계층에게 절대적 결핍을 해소하면서 품질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특히 빈곤 및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먹거리의 질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시장 논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나. 서울시 먹거리 보장 현황¹⁾

1) 먹거리 보장 수준

□ 식품 보장 수준²⁾

-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식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25.5%, 양과 질 모두 부족한 비율이 10.6%,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질적 미보장이 15.0%임
 - 식품 보장 수준³⁾으로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7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15.0%)’,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8.5%)’,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2.1%)’ 순임
-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비율은 지난 3년간 지속적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만 부족한 비율은 큰 차이 없이 일정 수준 유지

1)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의 “먹거리 보장 수준” 항목의 조사결괄 정리함. 본 조사는 2022년 7월~8월의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가구 내 만 18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0명의 표본을 층화집락추출하여 방문면접 조사함

2) [질문] 다음 최근 년 동안 귀하의 식생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 ②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지 못했다 ③ 먹을 것을 가끔 충분하게 못 먹었다 ④ 먹을 것을 자주 충분하게 못 먹었다

3) 2021년부터 다이어트 및 기타 편식, 채식주의자 등 원인으로 인한 자발적인 먹거리 미보장의 경우 먹거리 미보장에서 제외

- ‘양적, 질적 모두 충분’은 전년(77.6%) 대비 3.1%p 감소하였으며, ‘양적 충분, 질적 부족’은 전년(16.2%) 대비 1.2%p 감소, ‘양적, 질적 모두 부족’은 전년(6.2%) 대비 4.4%p 증가

[그림 2-1] 식품 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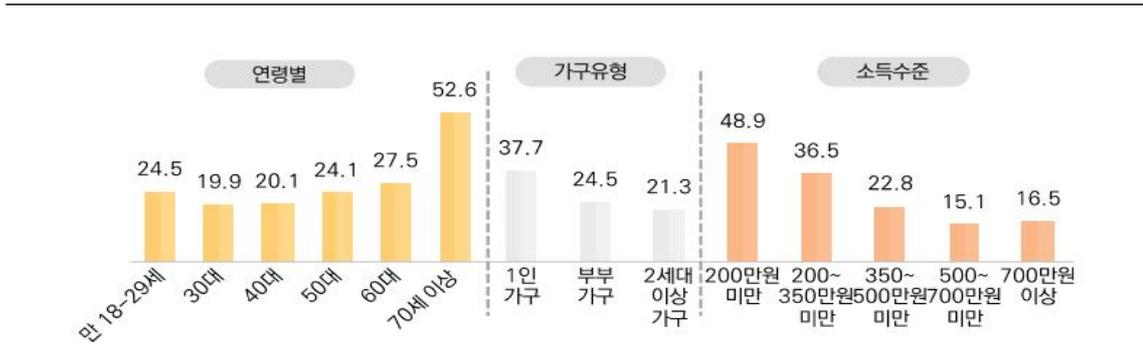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 70대 이상, 1인 가구, 저소득층에서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비율 높음
 - 남성과 여성에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의 차이는 없었음
 - 연령별 비교 시, 양적으로 충분했으나 질적으로 부족한 경우와 양적·질적 모두 부족한 경우는 70대 이상에서 총 52.5%로 가장 높았음
 - 가구형태 중 1인 가구가 양적으로 충분했으나 질적으로 부족한 경우와 양적, 질적 모두 부족한 경우 총 37.7%로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소득수준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먹거리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양적으로 충분했으나 질적으로 부족한 경우와 양적, 질적 모두 부족한 경우 총 48.9%로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2-2] 연령 가구유형 소득수준별 식품 미보장률

(Base : 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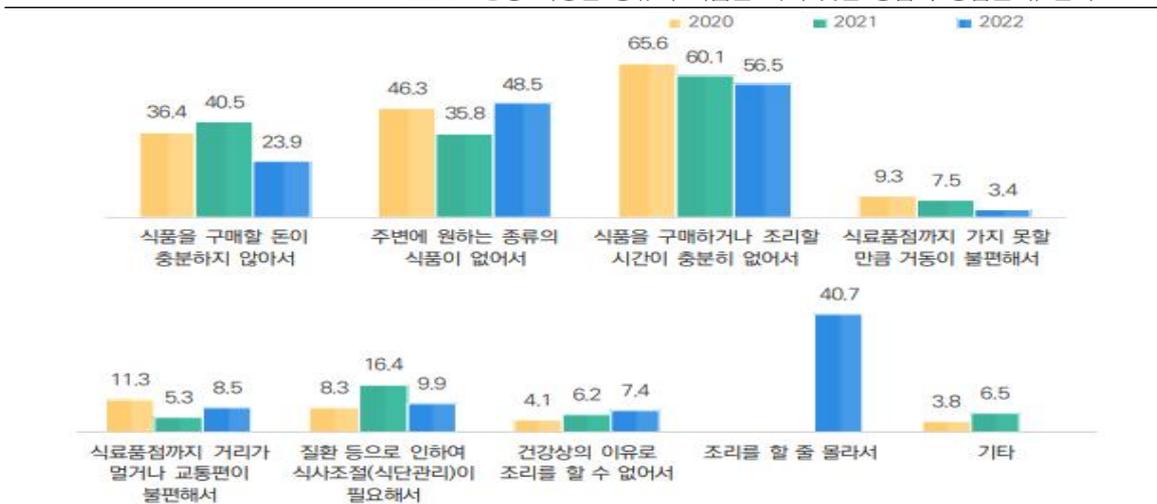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 식품의 질적 미보장 이유4)

- 식품의 질적 미보장 이유로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가 5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48.5%)’, ‘조리를 할 줄 몰라서(40.7%)’,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23.9%)’ 등의 순임(종합순위 기준)

[그림 2-3] 식품의 질적 미보장 이유

(Base :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지 못한 응답자 종합순위, 단위 : %)



출처 :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4) [질문]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③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④ 식료품점까지 가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⑤ 식료품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⑥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식단관리)이 필요해서 ⑦ 건강상의 이유로 조리를 할 수 없어서 ⑧ 조리를 할 줄 몰라서 ⑨ 기타

□ 식품의 양적 미보장 이유⁵⁾

- 식품의 양적 미보장 이유로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6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61.0%)’, ‘식료품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18.2%)’ 등의 순임(종합순위 기준)

[그림 2-4] 식품의 양적 미보장 이유

(Base :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지 못한 응답자 종합순위, 단위 : %)



출처 :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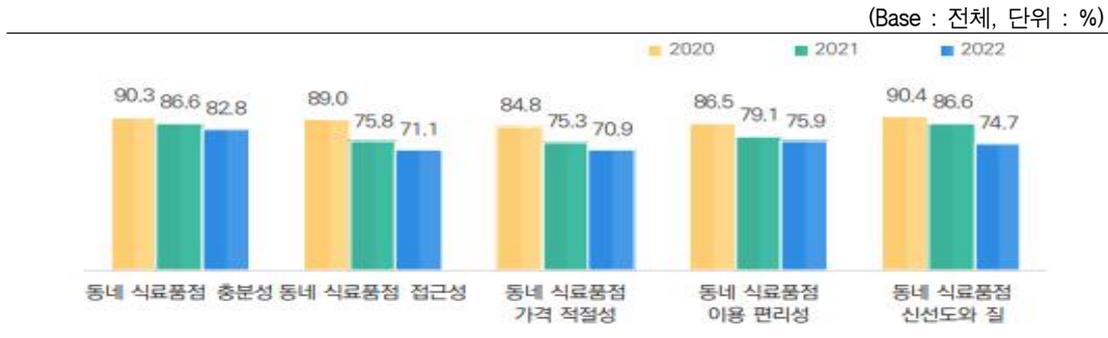
2) 지역사회 식품 환경

□ 지역사회 식품 환경 인식

- 지난 3년간 전체 만족 점수와 모든 항목 점수는 지속적 하락함
- (전체) 2020년 82.2점 → 2021년 74.9점 → 2022년 72.5점

5) [질문]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③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④ 식료품점까지 가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⑤ 식료품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⑥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식단관리)이 필요해서 ⑦ 건강상의 이유로 조리를 할 수 없어서 ⑧ 조리를 할 줄 몰라서 ⑨ 기타

[그림 2-5] 지역사회 식품 환경 항목별 긍정률



출처 :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 식품 환경 항목별 평가⁶⁾

- 지역사회 식품 환경 항목 중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충분성(82.8%)’, 가장 낮은 항목은 ‘가격 적절성(70.9%)’이며, 전체 만족도는 72.5점(100점 만점)
 - (동네 식료품점 충분성) 동네 식료품점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82.8%(매우 그렇다: 14.9% + 그렇다: 67.9%)로 ‘충분하지 않다(17.2%, 그렇지 않다: 16.9% + 매우 그렇지 않다: 0.4%)’는 응답보다 높음
 - (동네 식료품점 접근성) 동네 식료품점의 접근성이 ‘좋다’는 응답은 71.1%(매우 그렇다: 22.8% + 그렇다: 48.4%)로 ‘좋지 않다(28.9%, 그렇지 않다: 28.3% + 매우 그렇지 않다: 0.5%)’는 응답보다 높음
 - (동네 식료품점 가격 적절성) 동네 식료품점의 가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70.9% (매우 그렇다: 14.2% + 그렇다: 56.7%)로 ‘적절하지 않다(29.1%, 그렇지 않다: 28.3% + 매우 그렇지 않다: 0.8%)’는 응답보다 높음
 - (동네 식료품점 이용 편리성) 동네 식료품점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75.9% (매우 그렇다: 14.8% + 그렇다: 61.1%)로 ‘편리하지 않다(24.1%, 그렇지 않다: 22.9% + 매우 그렇지 않다: 1.2%)’는 응답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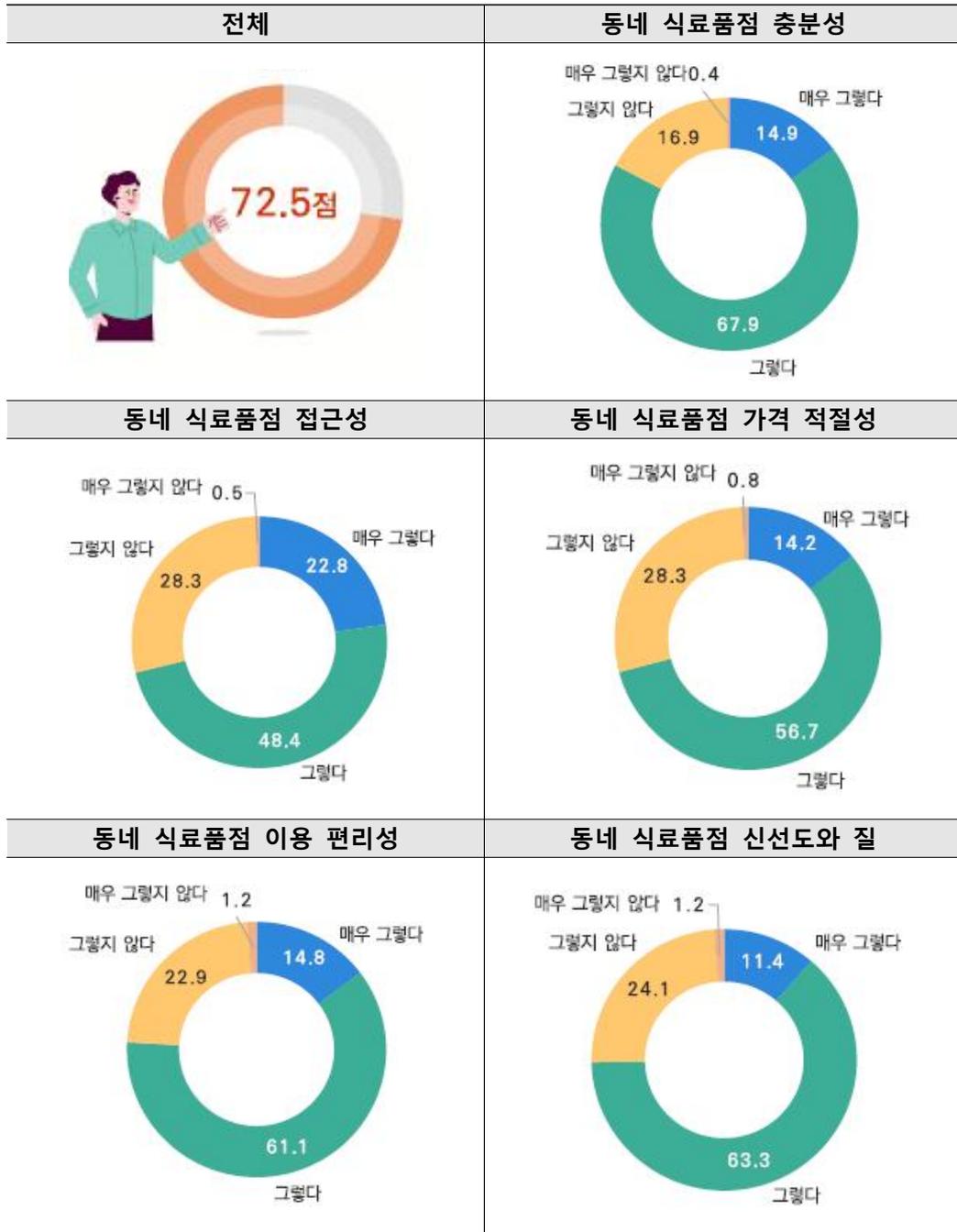
6) [질문]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식품 환경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우리 동네(집 근처)에는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과일 및 채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충분하다
-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 우리동네(집 근처)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다
- 우리동네(집 근처) 식료품점의 서비스(소량구매, 배달 여부, 영업 시간 등)는 잘 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 우리동네(집 근처)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신선하고 질이 좋다

- (동네 식료품점 신선도와 질) 동네 식료품점의 신선도와 질이 ‘좋다’는 응답은 74.7%(매우 그렇다: 11.4% + 그렇다: 63.3%)로 ‘좋지 않다(25.3%, 그렇지 않다: 24.1% + 매우 그렇지 않다: 1.2%)’는 응답보다 높음

[그림 2-6] 지역사회 식품 항목별 평가

(Base : 전체, 단위 : %)



출처 :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 남성은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에서 여성보다 식품 환경 인식이 좋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편의성, 가격 적절성에서는 여성이 더 비율이 높음
- 지역사회 식품 환경의 총 점수는 70대와 20대에서 낮음
 - 식품 환경 중 20대는 충분성과 수용성이 좋지않음에서 70대는 가격 적절성이 좋지 않음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가구형태에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에 식품 환경 점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소득수준에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69.84점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가구형태별 비교 시, 1인 가구는 접근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사회 식품 환경 항목에서 좋지 않음 비율이 높음
 - 소득수준별 비교 시, 200만원 미만 군에서 충분성, 가격 적절성, 수용성 항목에서 좋지 않음 비율이 높음

3)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먹거리 보장 수준

- 양적, 질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대상자는 70대 이상, 다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대상자임
 - 전체 대상자의 25.6%가 식품의 양은 충분했으나 다양하게 먹지 못했거나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지 못했다고 응답함
 -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먹거리 미보장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양은 충분했으나 질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물리적인 원인이 높았고, 양적, 질적으로 모두 충족하지 못한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의 비율이 높음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먹거리 보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양은 충분했으나 질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물리적인 원인이 높았고, 양적, 질적으로 모두 충족하지 못한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의 비율이 높음

□ 지역사회 식품 환경

- 지역사회 내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충분하고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대상자는 남성, 70대와 20대, 1인 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대상자였음
 - 지역사회 식품 환경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충분성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가격 적절성의 인식이 가장 좋지 않았음
 - 지역사회 식품 환경의 총 점수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낮았고 연령대별로 70대와 20대에서 낮았고 가구형태별로 1인 가구,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군에서 낮았음
 -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식품 환경의 총 점수가 가장 낮았던 집단은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대상자였음

□ 70대 이상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대상자에 먹거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한 먹거리 미보장뿐만 아니라 물리적, 신체적 원인으로 인한 먹거리 미보장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
- 소득 지원 또는 식품 지원과 같이 단순히 경제적인 중재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 건강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식생활 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먹거리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 확보가 필요

다.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

□ 먹거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먹거리 미보장 현황 파악 필요

- 서울시민의 먹거리 불안정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저소득 독거노인, 결식아동, 기초수급 대상자와 같은 전형적인 복지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젊은 부부, 1인 거주자, 주거불안자, 맞벌이 가구, 결혼이주여성 등이 먹거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충분히, 건강하게, 또는 정서적으로 잘 먹지 못하는 원인이 거주불안정, 시간과 조리 기술 부족, 문화적 차이, 질병 및 거동불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 그러나 서울시 먹거리보장 정책은 주로 소득 기준에 맞추어져 있음
 - 가구 구성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이른바 서울의 '신먹거리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적 보장을 넘어 먹거리 기본권 차원에서 먹거리 보장 정책을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먹거리 보장 정책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연계 전략이 요구

- 먹거리보장 정책은 주택, 여성, 복지, 노동 정책 등과 상호 연계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먹거리 문제는 '음식'이나 '식품'의 단편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쪽방, 고시원, 1인 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이 먹거리 문제를 심화시킴
 - 주거 조건 외에도 조리기술 부족,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노동, 육아 문제, 정서적 고립감 등도 개인이나 가구의 먹거리의 양적, 질적 보장에 영향을 미침

□ 먹거리 보장의 실천 주체의 역할이 중요

- 시민사회의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검토, 정책 반영과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은 반찬/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양곡 할인, 푸드마켓 이용 쿠폰 발급 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는 국제사회나 서울시가 선언한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할 수 없음

4. 먹거리 정책의 추진 필요성

가. 먹거리 위험사회 직면,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확대

- 기후변화, 곡물 가격 폭등, 인구증가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
 - 현재의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인류는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토양오염, 물 부족 문제까지 고려하면 식량위기 상황이 가속화될 전망(서울특별시, 2019)
 - 글로벌 푸드시스템 내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위기,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국민건강의 위기, 각종 가축 질병 및 화학첨가물로 인한 식품안전 위기 등 먹거리 관련 불안정성이 확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먹거리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우리 사회는 먹거리 ‘안전’ 과 ‘보장’ 측면에서 위험사회에 직면
- 먹거리 위기는 사회 전체의 위협과 연결되며, 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이러한 먹거리 위험사회에 대응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커뮤니티 푸드시스템 논의 확대와 먹거리 정책 개념 확장

- 농정의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전통적 먹거리 공급체계의 틀을 벗어나 지역 단위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선순환, 푸드시스템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함
- 먹거리 종합정책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 증대와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위상을 가지며, 선순환 푸드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역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전략을 포함함
- 또한, 먹거리 정책의 범위는 전통적인 농업(생산), 영양(소비), 유통(무역)에서 먹거리 보장, 환경부담, 농촌 위기, 식량의 분배, 영양 및 보건 등 광범위한 사회 영역을 포함함

□ 분절적인 먹거리 정책에서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지금까지의 먹거리 정책은 농업정책 관점에서의 식량정책, 영양정책, 식품안전 및 위생정책, 식품 산업정책 등 부문별로 추진됐으며, 사안에 따라 농정부서와 타 부서 정책 간 방향성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자원화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각각의 부문들이 연계된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먹거리 정책은 건강, 환경, 사회정의 등 사회적 주제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함

나.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먹거리 정책 필요

□ 도시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세계 인구의 절반은 도시에 살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재배되는 먹거리 비율은 15%에 불과하는 등 도시 먹거리의 외부 의존도가 높음
- 반면, 도시는 영양부족과 함께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이나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분배와 접근의 불균형,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패턴, 먹거리 손실과 낭비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도시의 먹거리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시민 먹거리 보장은 도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임

□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공동체 회복 관점의 정책 추진

- 먹거리 정책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 및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도시화로 붕괴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유지하고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도시 먹거리 정책의 필요성

-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의 문제
 - 도시의 시민들 모두가 양적, 질적으로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받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정책적 책무가 지자체에 있다는 인식이 대두
- 식품안전과 건강의 문제
 - 도시 저소득층일수록 먹거리로 인한 식원성 질병(당뇨, 비만, 아토피)에 취약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공급할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건설 측면의 필요성
 - 먹거리 분야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생활 밀착적 대응이 가능한 분야로 식생활 개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탄소배출 절감 가능
 -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텃밭을 통한 도심 녹화의 필요성 대두
 - 근교농지 보전을 통하여 도농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가능
- 먹거리 분야의 경제적 중요성
 - 먹거리 분야는 식품 가공, 외식, 급식 영역 등 도시 내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 분야의 하나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 강화 가능
 - 지역의 중소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도시의 식품분야 공공정책과 공공조달의 필요성
 - 학교급식의 중요성 및 로컬푸드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식품 공공조달 분야 부터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 병원, 사회복지시설, 대학, 공공기관 등 점차 다양한 공공급식과 공공조달 정책으로 확산 가능

Ⅲ. 지역먹거리계획의 의의 및 국내외 추진사례 분석

1. 지역먹거리계획의 의의 및 수립 배경

가.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개념 및 특징

1)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개념

□ 먹거리계획은 최상위 먹거리 기본계획이자 종합계획

- 먹거리계획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과 내용을 제도화하고, 프로그램한 것
 -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배려한 먹거리'를 통하여 먹거리정의 실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김종안 외, 2018:7)
- 모든 시민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최상위 먹거리 기본계획이자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김종안 외, 20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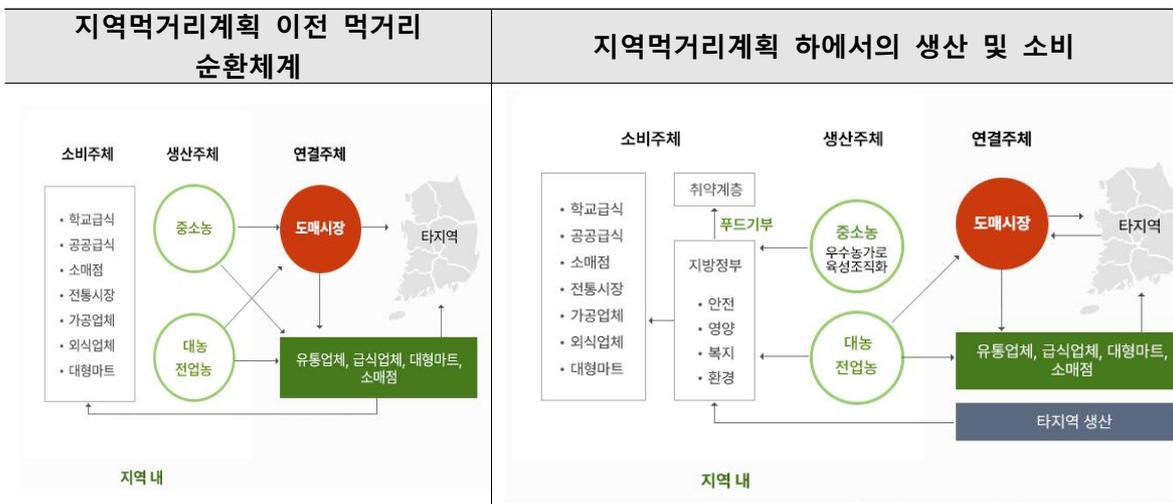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 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 프로그램

-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의미
- 한편,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식품안정성, 가격안정성, 취약지역·취약계층의 접근성 등 지역 내 먹거리 문제를 공공성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를 확대한 것이라는 관점도 존재(정은미 외, 2019:12)

□ 지역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순환체계로 전환

-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소비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출발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에게 건강 안전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 먹거리를 중심으로 “상품-사람-환경의 순환구조를 복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 방안을 의미

[그림 3-1] 지역먹거리계획 전후 먹거리 순환체계 비교



출처 : 바로정보 홈페이지(<https://www.baroinfo.com>)

2)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주요 요소

□ 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

-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공공급식(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등), 직매장, 외식·가공업체 등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

□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공급

- 지역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공급계획을 산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먹거리를 확보(지역 농가·마을·가공식품기업 등 견인)

- 기후요인 등으로 지역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지역 간 제휴 검토

□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 당일 수확·당일 판매 원칙, 저온 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 보장, 친환경·GAP·HACCP 의무 적용 및 안전성 검사 강화

□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조달, 안전, 식교육, 도농 교류 등 총괄 관리
- 급식단체, 청년네트워크,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구축

3) 지역먹거리계획의 특징

□ 먹거리 체계의 전환

- 농장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는 기존의 ‘넓은 먹거리 체계’를 ‘새로운 먹거리 체계’로 전환하는 ‘먹거리 체계의 전환’ 임
- 그동안 먹거리 전략은 주로 생산 분야인 농업, 소비 분야인 영양, 무역 분야인 유통의 관점에서 파악해 왔는데, 현대사회의 먹거리는 농업 위기, 식품안전, 건강 악화, 사회적 불평등, 도시문제, 환경부담 등과 같이 일상적인 위협이 종합적으로 중첩된 문제로 존재함
- 현대 먹거리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대응인 먹거리 전략은 부분적 영역, 특정한 부문에 그쳐서는 안 됨

□ 먹거리 문제는 서로 연관되는 복잡성 존재

- 먹거리계획은 ‘농업, 도시, 건강, 환경, 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여 누구를 먹일 것인가’의 생산역량, ‘사회적인 격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분배역량의 균형을 찾는 정책의 복잡성이 존재함

- 굶주림과 영양부족에 대응하는 ‘생산능력’과 소득 차이·격차에 따른 ‘사회적 능력’ 간에 더욱 유효하게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거리계획 실행에서 중심 영역을 바꾸어 가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

□ 먹거리를 둘러싼 주체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하며 상충

-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조직 및 활동 주체는 경쟁적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긴장 관계와 다툼이 발생하기 쉬움
- 시장에서 주체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분석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먹거리계획은 사업과 활동을 하는 주체들 사이의 거래관계 등을 재조정·재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파트너십과 실행하는 거버넌스를 다층적이고 다부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임

□ 공공(公共)의 이익(公익)의 판단

- 먹거리계획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해득실과 관계망에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결정한다’는 논리로 (사회적)책임을 개인(소비자)의 선택·행동으로 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누가 ‘현실적 주도권’을 갖는지 판단하여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정해야 할 것

□ 정책의 효과성과 통합성

-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응은 다양한 범위에서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함
-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통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함

□ 정책의 시장 개입에 대한 수준

- 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정책의 초점을 ‘시장의 재구성’에 둘 것인지 ‘개별 소비의 행동 장려’에 둘 것인지 ‘체계의 변화’에 둘 것인가, ‘틈새시장 성장’에 둘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매우 민감하게 나타남(황영모, 2015)

4) 지역먹거리계획의 유형

□ 도시형

- 먹거리의 생산이나 가공보다는 유통과 소비가 중심이 되는 대도시 지역이 대상이며, 주로 소비와 관련된 먹거리 정의 및 복지, 건강, 안전 등이 현안 사항인 경우가 많음
- 대도시 지역은 여건상 자체적인 먹거리 생산기반이 약하므로 생산기반을 보유한 농촌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 농촌형

- 농촌형은 먹거리 소비보다는 생산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이 대상이며, 생산 구조 양극화와 농업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악화 등 한국 농촌의 전형적인 문제들이 주요 현안 사항인 경우가 많음
- 지역의 취약한 농업생산 구조와 소득 불안정 문제를 전략적 먹거리 소비지 발굴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생산을 지역 소비와 연계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푸드플랜 초기에는 소비지와 연계한 맞춤형 먹거리 생산을 통해 지역 산업인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
 - 이후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부 먹거리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포괄적인 영역으로 대상을 확장

□ 도농복합형

- 도농복합형은 지역 내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형태로, 먹거리 보장 수준을 포함한 전반적 생활 영역에서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개념이 약해지는 것이 현안 사항임
- 도농복합형 푸드플랜에서는 도시지역 소비자와 농촌 지역 생산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면서 지역의 전반적인 먹거리 보장 수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임
- 도농 상생에 기초하여 지역 차원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을 먹거리 공동체로 묶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

나.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배경

1) 먹거리 기본권 강화

□ 먹거리의 질적인 보장, 윤리적인 소비 등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

-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먹거리의 질적인 보장, 윤리적인 소비 등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
- 먹거리의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량 뿐만 아니라 먹거리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먹거리 양극화 해소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
 - 영양과잉으로 성인병이 확산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 급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결식 등 먹거리의 양적/질적 미흡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등 먹거리 불균형이 심화

□ 먹거리 영역에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

-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먹거리 영역에까지 확장되면서 먹거리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먹거리의 공공재로서의 기능 확대,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먹거리가 위험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 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기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이해 접근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김흥주, 2012)
- 소비자(국민)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항상 적절한 가격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최지현, 2017)

□ 먹거리 선진국,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 및 보장

- 먹거리 선진국은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는 수준의 먹거리 정책을 넘어 먹거리를 중심으로 건강, 환경, 문화, 사회정의, 복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먹거리 보장 정책 추진 중

2) 먹거리 불안요인 확대

□ 식품 체계 발달 결과에 기인한 먹거리 불안 요인 증대

- 현대사회의 위험은 근대화의 성공, 즉 기술 및 경제적 발전에 기인한다는 울리히 벡(Ulich Beck)의 이야기처럼 먹거리의 위험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농식품 체계 발달의 결과에 기인(김철규 외, 2012)
 - 현대사회의 농식품 체계는 산업화, 전문화, 규모화, 글로벌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포드주의에 기초한 대량생산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초국적 농식품 기업의 세계 농식품 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대
 - 농식품 기업의 각종 화학첨가물 과다 사용이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공(김철규 외, 2012)

□ 녹색혁명, 글로벌화, 초국적 농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먹거리 위험성 증가

- 녹색혁명, 글로벌화, 초국적 농기업의 태동 등은 세계 먹거리의 총량 및 일국의 먹거리 다양성(다양한 농식품 수입에 의한 다양성) 등 개선에 크게 기여 하였지만, 이와 비례해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생산량은 많이 증가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집약생산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GMO 농산물 확대 등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먹거리 위험요인 증가
- 세계화된 농식품 체계는 먹거리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각종 첨가제 투입, 개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초국적 농기업의 활동에 대한 개별 국가의 먹거리 위험 관리의 한계성 등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 요인 확대
- 이밖에 기후 변화에 기인한 식중독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에 기인한 식품 위해 인자들의 증가로 인한 먹거리 위험 요인 또한 증가

□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확대

- 먹거리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음
- 한국인은 사회적 위험의 심각성을 가장 높게 본 분야는 환경오염이지만, 본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먹거리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음 (김철규 외, 2012)

□ 먹거리 안전 보장시스템의 효율적 정착이 과제

- 다양한 유형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로 대두
- 정부 주도의 먹거리 안전 시스템은 부실 인증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를 축소하는 먹거리 시스템은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 용이성 등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

3) 식량주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제기

□ 녹색혁명, 글로벌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녹색혁명, 글로벌화 등은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농식품 기업의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 향상, 식량자급률 하락, 농촌의 양극화 확대 등 결과 초래
 - 녹색혁명은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효율성에 기초한 기업화 된 농업 생산 양식 확대
 - 기업화된 생산양식으로 생산된 저가 농산물의 세계 시장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면서 곡물자급률이 하락하고, 중소농의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양극화 및 농가인구 감소에 기인한 농촌기능 약화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적 시각 확대
 - 한국도 2004~2014년 기간 동안 농업 생산성은 평균 30%가 향상되었지만, 상위 10%의 재배 농가가 전체 농지의 49.3%를 점유하는 등 일부 대농에게 농지가 집중되고, 곡물자급률은 하락세 지속

□ 대안적 농업에 대한 관심 확대

- 초국적 농식품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확대와 함께 지역 중심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해 식량 자급(주권) 확대,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는 대안적 농업에 관한 관심 확대
 - 농업생산량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급변, BT 산업 발전 등에 기인한 식량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초국적 농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농산물시장에 자국의 식량안보를 의지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 확대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의 자급률(식량주권)을 향상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관심 확대

4)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먹거리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 관한 관심 확대

- 생산성, 효율성 향상 위주의 대량 투입에 의한 농업생산 방식을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확대해 환경부담을 완화하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 관한 관심 확대

- 농산물 재배환경에 부담을 주는 생산성 및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과도한 투입에 의한 농업생산 방식은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강조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농약, 비료 등 사용 최소화 강조
-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을 확대해 생산 부문의 환경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순환적인 농산물 생산 및 소비시스템 구축

□ 먹거리의 안전성, 환경부담 완화 차원을 넘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까지 강조

-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은 글로벌화, 전문화, 규모화된 먹거리 시스템이 가져온 부정적인 과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먹거리의 안전성, 환경부담 완화 등의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까지 강조
 - 농업의 생산방식이 규모화, 전문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농업생산이 일부 규모화 혹은 기업화된 생산자(법인)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농이 위축되고 농촌의 양극화 현상 심화 및 농촌기능 약화 가속화 등의 우려 확대
 - 글로벌 농식품기업 체제가 확대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농식품 체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가치를 완전히 시장 시키며, 생산자 및 도시의 소비자를 수동적으로 전락시키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계속 감소(김철규, 2008)

□ 생산과 소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축소를 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의 관심 확대

- 글로벌 농식품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를 축소하는 지역 중심의 먹거리체계 구축에 관한 관심 확대
 - 지역 단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시켜 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식품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에 환원시키며, 중·소농의 활로를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관심 확대

다. 지역먹거리계획의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지원

- 2018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에서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9곳(충청남도, 서대문구, 유성구, 나주시, 상주시, 춘천시, 완주군, 해남군, 청양군)을 선정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시작
-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지자체가 안정적인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된 16개 농림사업을 5년간 지원하는 패키지(일괄) 지원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37곳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비 1,192억원 규모를 지원
- 2023년에는 주체별 실행 역량 강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사업 예산을 104억원까지 확대하였고, 4월에는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36억원 지원
- 계획 수립 초기지역은 중소농 조직화와 판로확대, 친환경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사업,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물적 기반과 물류체계 구축 추진, 농정부서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나, 점차 먹거리 기본권 실현, 먹거리 보장 강화 등 정책 목표 제시, 민관의 먹거리 거버넌스 확대, 식생활 교육, 환경, 사회적경제 등의 영역과 사업 연계, 부서간 협력 제도화(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등으로 성숙

□ 2022년 말 기준, 전국 139개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 완료 및 추진 중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5개에서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139개(57.2%)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수립을 추진 중

[그림 3-2]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현황



주 : <광역지자체> 수립완료(10)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수립중(7) 인천, 세종, 전북, 강원, 전북, 대구, 광주
 <자치구> 수립완료(4)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광주 광산구
 수립중(3) 서울 은평구, 광주 동구, 인천 서구
 출처: 윤병선 외(2023),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 자료집, 민형배 의원실·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

- 2023년 11월 현재 기준, 전국 95개 지자체에서 「먹거리 기본(권) 조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먹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의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4개(82.4%)가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81개(35.8%)가 먹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함

<표 3-1>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3.11월 기준)

시도		기초	지자체명
서울	○	1	서대문구
부산	○	-	
대구	-	1	달성군
인천	○	-	
광주	-	1	광산구
대전	-	2	유성구, 대덕구
울산	○	-	
세종	○	-	
경기	○	23	용인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시흥시, 광명시, 구리시, 고양시, 수원시, 평택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부천시, 안성시, 안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포천시
강원	○	4	춘천시, 홍천군, 동해시, 평창군
충북	○	6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청주시
충남	○	8	부여군,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 태안군
전북	○	11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남원시, 고창군,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전남	○	11	완도군, 화순군, 장성군,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함평군, 담양군,
경북	○	3	의성군, 구미시, 영천시
경남	○	10	김해시, 거창군,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3.11.20. 검색자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 추진 근거 마련

- 지역먹거리계획 확대에도 그동안 계획 수립, 공급조직 설치, 조례 제정, 지원 근거 등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시행 2022.7.5.)으로 지자체에서의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의 신설

〈표 3-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조문 내용

-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사례

가.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
- 서울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식품정책과-22880호 2021.10.12.)
- 1인 가구 맞춤형 안심정책 및 안심서울 프로젝트(시장공약사항)

□ 수립 방향

- 가치, 지향성, 정책영역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전환
-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정책 수립 참여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실현
- 다변하는 사회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 빅데이터 활용 및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강화
-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보장 대상 확대

□ 중점 추진사항

신규	사회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식생활 역량강화 지원 정책○ 재난 상황별 먹거리지원 채널 마련○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강화	빅데이터 등 최신정보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감시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먹거리 통합정보 고도화	
확대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대상으로의 먹거리 기준 마련	

□ 비전 및 목표

비 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가 치		
정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2. 누구에게나 충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한다 3. 기후변화 및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먹거리 보장체계를 구축한다. 4. 지역 및 도농 먹거리 주체들의 상생을 도모한다. 5. 먹거리 기반 공동체를 지원하고 먹거리 들뜸체계를 구축한다 6.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 활동을 지원한다. 	
정책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②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 확대 ③ 상생과 먹거리 경제 활성화 ④ 먹거리 공동체로 소통 강화 ⑤ 환경생태친화 먹거리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거리 기반 시민건강 증진 2. 생애주기 맞춤형 식생활 실천 환경조성 3.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4.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5. 생애주기별 질적 먹거리 충족을 위한 먹거리 전달체계 개편 6.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먹거리 지원 시스템 구축 중점 7. 도농상생의 먹거리 기반(체계) 구축 8. 지역상생 먹거리 경제 활성화 지원 9. 먹거리 공동체 생태계 조성 10. 먹거리 기반 지역사회 통합 들뜸 사업 강화 1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12. 먹거리를 매개로 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13.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시민 실천 환경조성
특화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1인 가구 먹거리 정책 및 식품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서울시 1인 가구 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 중점 15.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 시스템 강화 중점
정책기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통합 먹거리 정책 기반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먹거리 거버넌스 강화 17. 먹거리 정책 통합추진 및 평가체계 구축 중점 18. 먹거리 국제 협력 체계 강화 19. 서울시 먹거리 정보 관리체계 구축

□ 정책 및 특화과제

○ 7대 분야, 19개 이행과제, 45개 세부 사업(신규 18개, 확대 14개, 계속 13개)

이행과제	세부사업	구분	담당부서
【분야 1】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1. 먹거리 기반 시민건강 증진	(1) 임산부 및 영유아 맞춤형 영양관리	계속	식품정책과
	(2) 건강한 식생활 실천 사업	계속	식품정책과
	(3) 만성질환 어르신 영양관리	계속	보건이료정책과
2. 생애주기 맞춤형 식생활 실천 환경조성	(4)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계속	식품정책과
	(5) 성인 식생활 개선 교육	확대	식품정책과
	(6) 즐거운 음식문화 만들기와 교류 확대	계속	식품정책과
3.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7) 생산부터 유통까지 식품안전관리	계속	식품정책과
	(8) 식품위생 관리 서비스 확대	계속	식품정책과
	(9)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신규	식품정책과
【분야 2】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 확대			
4.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10) 미래세대 친환경 무상 급식 확대	확대	친환경급식과
	(11) 취약계층 영양바우처 지원 사업	신규	식품정책과
5. 생애주기별 질적 먹거리 충족을 위한 먹거리 전달체계 개편	(12)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및 이용 확대	확대	가족담당관
	(13) 지역사회 중심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계속	인생이웃지원과
	(14)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확대	지역돌봄복지과
6.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먹거리 지원 시스템 구축 중점	(15) 재난 상황별 먹거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신규	식품정책과
	(16) 먹거리 비대면 지원 지침 마련	신규	식품정책과
【분야 3】 상생과 먹거리 경제 활성화			
7. 도농상생의 먹거리 기반 (체계) 구축	(17) 공공급식 확대 및 공공조달체계 강화	계속	친환경급식과
	(18) 도농상생 교류 및 체험 확대	계속	친환경급식과 도시농업과
8. 지역상생 먹거리 경제 활성화 지원	(19) 먹거리 기반 사회적경제 활동 촉진	신규	식품정책과
【분야 4】 먹거리 공동체로 소통 강화			
9. 먹거리 공동체 생태계 조성	(20) 공유공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확대	지역공동체과
10. 먹거리 기반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확대	(21) 지역사회 돌봄밥상 운영 확대	신규	식품정책과
【분야 5】 환경생태 친화 먹거리 지원			
1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22) 도시농업 공간 확대	계속	도시농업과
	(23) 도시농업 참여 활성화	계속	도시농업과
	(24) 도시농업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계속	도시농업과
12. 먹거리를 매개로 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25) 일회용 포장용기 없는 매장 지원 및 확대	신규	자원순환과
	(2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확대	생활환경과

	(27) 잉여 신선식품 선순환 체계 구축	신규	식품정책과
13.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시민 실천 환경조성	(28) 환경을 위한 먹거리 실천 교육	확대	친환경급식과 식품정책과
	(29) 「지구건강식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신규	식품정책과
【분야 6】 1인 가구 먹거리 정책 및 식품안전 감시 시스템 강화			
14. 서울시 1인 가구 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 중점	(30) 1인 가구 먹거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기반 마련	신규	식품정책과
	(31) 1인 가구 착한 먹거리 지원	신규	식품정책과
	(32) 1인 가구 건강 먹거리 섭취 실천 환경조성	신규	식품정책과
15.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시스템 강화 중점	(33) 식품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기능 확대	신규	식품정책과
	(34) 먹거리이슈 대응체계를 위한 위해물질 감시 시스템 기반 마련	신규	식품정책과
	(35) 공무원 및 감시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	확대	식품정책과
【분야 7】 통합 먹거리 정책 기반 마련			
16. 먹거리 거버넌스 강화	(36)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협력체계 강화	확대	식품정책과
	(37) 서울시-자치구 먹거리 거버넌스 및 정책 추진 지원	신규	식품정책과
17. 먹거리 정책 통합 추진 및 평가체계 구축 중점	(38) 먹거리 정책 통합추진 전담 조직 기반 마련	신규	식품정책과
	(39) 이행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확대	식품정책과
	(40) 먹거리 보장 기준 수립 및 추진	신규	식품정책과
18. 먹거리 국제 협력체계 강화	(41) 밀라노협약 참여 확대로 먹거리 국제협력 주도	확대	식품정책과
	(42) 서울 도시먹거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확대	식품정책과
	(43) 해외 먹거리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	신규	식품정책과
19. 서울 먹거리 정보 관리체계 구축	(44)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및 지표 개발	확대	식품정책과
	(45) 서울 먹거리 통합정보(FTI, Food Total Information) 고도화	확대	식품정책과

□ 이행관리

- 먹거리 5개년 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단 구성
 - 먹거리시민위원회, 외부전문가, 내부공무원 등 평가단 구성하여 연 1회 운영
 - 평가단은 계획 이행성과 및 지표 달성 점검, 평가내용 환류를 통한 차기 계획 수립을 지원함
- 성과지표 중심의 이행관리
 - 영역별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이행정도 평가 및 관리
 - 기존 먹거리 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신규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방안 마련

- 연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
-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최종 평가
 - 2025년 12월,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점검
 - 먹거리 5개년 계획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최종성과 달성 정도
 - 먹거리전략 2030 2차 5개년('26~'30)계획 수립 관련 정책 및 사업 제안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2017년 9월 제정)

□ 먹거리 보장기본권 실현을 위해 제정

-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제정 및 시행일, 2017. 9. 21)
- 제정 당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주요 내용

- | |
|--|
| <p>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6조)</p> <p>나.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p> <p>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20조)</p> <p>라.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파·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안 제21조 ~ 제34조)</p> |
|--|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서대문구 먹거리종합계획(도시형)⁷⁾

□ 수립배경

- 전형적인 소비도시로 푸드시스템 취약, 먹거리 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 접근 필요

□ 기본관점

-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먹거리 전략
 - 지속가능한 생활경제 체계,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 시장 중심, 개발 중심 경제에서 협동생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
- 도농 상생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확보
 - 도시의 위기를 농촌과의 연대를 통해 극복한다는 관점, 농촌과 환경에 대한 배려 관점
 - 지역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체적이며 선도적인 개면의 지역으로 패러다임 전환

□ 수립주체

- 서대문구 푸드플랜 민·관 TFT 주축

□ 비전 및 목표, 핵심가치



7) 김청순(2019)의 “푸드플랜 개념 및 서대문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정리

□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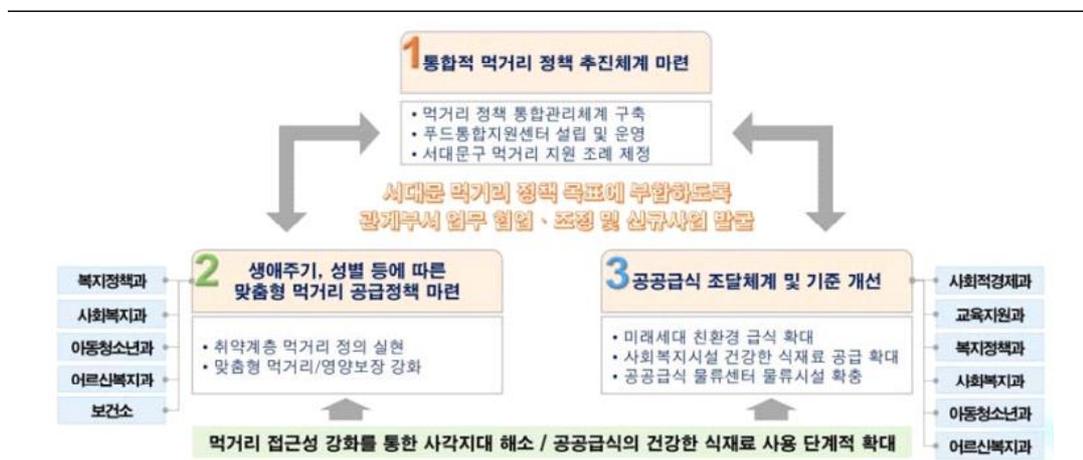
<p>소외없는 밥상</p> <p>서대문구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한다.</p>	<p>목표1 공공급식(학교, 어린이집, 기관 구내식당, 병원,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한다.</p> <p>목표2 시민의 식품관련 건강문제(예 : 비만, 당뇨 등)를 줄인다.</p> <p>목표3 모든 시민은 신선하고 영양 균형이 확보된 양질의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다.</p>
<p>배려하는 밥상</p> <p>환경과 농업을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체계를 구축한다.</p>	<p>목표4 도시 속 다양한 형태의 텃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나누는 시민이 늘어날 것이다.</p> <p>목표5 먹거리를 상품이 아닌 생활재(生活材)로 인식하고, 생산자와의 상생을 모색한다</p> <p>목표6 음식을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농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이다.</p>
<p>함께하는 밥상</p> <p>지역사회, 민·관이 함께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한다.</p>	<p>목표7 먹거리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을 확대한다.</p> <p>목표8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식교육 관련 민간단체는 먹거리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p> <p>목표9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p>

□ 세부 전략별 실행 과제

○ 소외없는 밥상

- (전략체계) 경제적·사회적 형편과 상관없이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서대문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과제 제안

[그림 3-3] ‘소외없는 밥상’의 전략체계



출처: 길청순(2019), 푸드플랜 개념 및 서대문구 연구용역 결과보고, 2019년 푸드플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서대문구 푸드플랜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전략별 세부사업) 신규사업은 3개 전략과제와 5개 세부과제, 18개 사업이며, 기존사업은 2개 전략과제와 3개 세부과제, 10개 사업

[그림 3-4] ‘소외없는 밥상’의 전략별 세부사업

신규사업(3개 전략과제, 5개 세부과제, 18개 사업)			기존사업(2개 전략과제, 3개 세부과제, 10개 사업)		
구분	사업구분		구분	사업구분	
1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1	생애주기, 성별 등에 따른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마련	
①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①	취약계층 먹거리 점의 실현	
a	먹거리 전달부서 위상 강화	신규	f	정당은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지원	기존
b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신규	g	취약계층 양곡할인 지원	기존
c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	신규	h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기존
d	서대문구 GOOD푸드 기금 조례 제정	신규	i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기존
2	생애주기, 성별 등에 따른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마련		j	영양플러스사업	기존
①	취약계층 먹거리 점의 실현		3	공공급식 조달체계 및 기준 개선	
a	정당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운영	신규	②	미래세대 친환경 급식 확대	
b	경로당 실버푸드 효도박스 지원	신규	a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기존
c	정당은 이동식 푸드마켓 운영	신규	b	유치원, 초·중·고 식재료 지원	기존
d	정당은 나눔냉장고 도입 및 운영	신규	c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기존
e	취약계층 대상 모니터링	신규	d	어린이집 친환경급간식비 지원	기존
②	맞춤형 먹거리/영양보장 사업		③	공공급식센터 운영 지원	
a	우리아이 아침밥상 지원사업	신규	a	공공급식 운영 지원	기존
b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규			
c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사업	신규			
d	어르신 건강마일리지(식품 연계)	신규			
e	정년 소셜다이닝 사업	신규			
3	공공급식 조달체계 및 기준 개선				
②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공급 확대				
a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b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 참여 확대	신규			
③	공공급식센터 운영 지원				
b	공공급식센터 물류시설 확충	신규			
c	서대문구 굿푸드 인증제도	신규			

출처: 김청순(2019), 푸드플랜 개념 및 서대문구 연구용역 결과보고, 2019년 푸드플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서대문구 푸드플랜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배려하는 밥상

- (전략체계) 생태친환경적인 도시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동교류를 통한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제안, 먹거리를 상품이 아닌 생활재로 인식, 신뢰에 기반한 먹거리 소비 여건 조성

[그림 3-5] ‘배려하는 밥상’의 전략체계



출처: 김청순(2019), 푸드플랜 개념 및 서대문구 연구용역 결과보고, 2019년 푸드플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서대문구 푸드플랜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전략별 세부사업) 신규사업 3개 전략과제와 4개 세부과제, 11개 사업임

[그림 3-8] ‘함께하는 밥상’ 의 전략별 세부사업

신규사업(3개 전략과제, 4개 세부과제, 11개 사업)		
	구분	사업구분
1	먹거리위원회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①	먹거리위원회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a	먹거리위원회 구성	신규
b	먹거리위원회 역량개발(워크숍, 학습모임)	신규
c	서대문구먹거리네트워크 구성	신규
2	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	서대문구 푸드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신규
b	서대문 먹거리 혁신 주간(먹거리 포럼과 연계)	신규
②	식교육 인프라 구축	
a	학교 가사실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규
b	서대문구 쿠킹버스 시범사업	신규
3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①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a	협동마트 사업	신규
b	마을밥상 지원사업	신규
c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사업	신규
d	열린 마을부엌 사업	신규

출처: 김청순(2019), 푸드플랜 개념 및 서대문구 연구용역 결과보고, 2019년 푸드플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서대문구 푸드플랜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거버넌스 구축

- 시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분절적 영역과 정책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 확대

[그림 3-9] 서대문구 먹거리종합계획의 거버넌스 구축 프로세스



출처: 김청순(2019), 푸드플랜 개념 및 서대문구 연구용역 결과보고, 2019년 푸드플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서대문구 푸드플랜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2020년 2월 제정)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주민의 먹거리 보장 실현을 위해 제정

-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 먹거리정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제정 및 시행일, 2020.2.19.)
- 제정 당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4>와 같음

<표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6조)
나.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기준과 지표설정 등, 실태조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교육 및 홍보, 모니터링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4조)
라.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위원회의 등, 분과, 실무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공청회 등 개최,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파·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규정함 (안 제15조 ~ 제28조)
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29조 ~ 제30조)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 은평구 푸드플랜⁸⁾

□ 비전체계

- 도시의 먹거리체계를 바꾸어 소비도시인 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먹거리정의 도시의 실현을 지향
 - 은평구 먹거리 비전 2030은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한 먹거리정의 도시, 은평”

8)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의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을 참고하여 정리

- 푸드플랜 비전의 핵심인 먹거리정의 실현은 구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될 때 가능
-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자기에 필요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민 개인의 내적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의 외적 환경조성을 지향
- 개인 건강을 증진하여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전략의 수립시 의료, 주거, 관계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가 공의(公議) 되어야 함

[그림 3-10] 은평구 푸드플랜 비전 체계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부문별 전략 실행계획

- 먹거리 기반 구민 건강 개선

[그림 3-11] '먹거리 기반 구민 건강 개선'의 세부 전략과 핵심 정책 구조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먹거리 기반 구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

[그림 3-12] ‘먹거리 기반 구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의 세부 전략과 핵심 정책 구조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먹거리 기반 대안적 경제 활성화

[그림 3-13] ‘먹거리 기반 대안적 경제 활성화’의 세부 전략과 핵심 정책 구조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먹거리 기반 공동체 활성화

[그림 3-14] ‘먹거리 기반 공동체 활성화’의 세부 전략과 핵심 정책 구조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먹거리 기반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 3-15] ‘먹거리 기반 기후위기 대응 강화’의 세부 전략과 핵심 정책 구조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먹거리 정책 실행 환경 조성

- (먹거리 기본권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
- (먹거리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먹거리 정책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먹거리 위원회(거버넌스), 먹거리 정책 전담부서, 중간지원 조직 간 삼각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먹거리 정책 구조를 제시
- (먹거리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먹거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과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을 제시

[그림 3-16] 은평구 먹거리 정책 환경 조성 : 제도적 기반 구축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의,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푸드플랜 핵심 정책 목표(2027)

○ 5개 전략과 정책환경 조성에 대하여 총 22개의 핵심 정책목표를 2027년까지 달성

[그림 3-17] 은평구 푸드플랜 핵심 정책 목표(2027년)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3. 해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사례⁹⁾

가.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 추진 배경

-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먹거리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강조(허남혁, 2016)
 - 10억 명 내외의 인구가 굶주림에 직면한 반면, 약 2,800만 명의 인구는 비만, 영양과잉 등 먹거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13억톤의 음식이 낭비
 - 식중독, 비만 등 잘못된 식습관 및 식품에 기인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부족 및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
 - 세계적으로 먹거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먹거리 분배 및 안정적 공급 문제 심화
- 도농 연계 강화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먹거리 생산체제에서 배제되어 가는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해 모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생물의 다양성도 보호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대

□ 주요 내용¹⁰⁾

- 도시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전략과제 제시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확보, 모든 시민의 건강한 영양, 먹거리 낭비를 피하기 위한 자원관리 등 3개 분야의 도시먹거리정책 목표 제시
 - 먹거리보장에 초점을 두고 배고픔 종식, 비만/영양불균형 등 영양상태 개선,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시스템 구축

9) 경기연구원(2019)의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및 추진 방안 연구용역” 을 참고하여 재정리

10) 문은숙 외(2016)의 “ ‘밀라노먹거리협약’ 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의 내용을 요약

및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 제시

- 실행을 위한 도시먹거리 정책 추진 방향으로 6개 영역(먹거리정책 거버넌스,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과 유통, 먹거리 폐기) 37개 분야의 권장 실행 과제 제시

<표 3-5> 밀라노협약에서 제시한 도시먹거리정책 실행 분야 및 과제

분야	실행과제	분야	실행과제
거버넌스	1. 지방정부 내 기관 및 부서 간 협력 촉진	푸드의 생산	20. 도시재생계획 통해 도시와 근교농업 통합
	2. 지역 수준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21. 도시 인근 농촌의 푸드 생산/가공/유통 추구
	3. 지역정책과 시민사회 푸드계획 수립 및 평가		22. 통합 토지이용계획 관리 위한 생태계 접근법 지원
	4. 지역푸드 정책/계획의 개발수정과 역량 구축		23. 지속가능 푸드생산 위해 토지 접근 및 사용권 보호
	5. 푸드시스템 자료 구축 위한 다중정보 시스템 개발		24. 도시주변 생산자에게 실행가능한 서비스 지원
	6. 푸드시스템 회복력 위한 재해위험 감소 전략 개발		25. 도시-농촌 거리 축소, 생산자-소비자 연계 지원
식생활과 영양	7. 지속가능한 식생활(건강/안전/환경/문화/권리) 홍보	푸드공급과 유형	26. 물(폐기물) 관리개선, 농업/푸드식품생산 재사용
	8. 나쁜 식생활 및 비만 관련 비전염성 질병 해결 착수		27. 적절한 푸드 접근성 보장 위해 푸드의 흐름 평가
	9. 푸드 관련 주체 위한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 개발		28. 푸드의 저장/가공/수송/유통의 개선된 기술 지원
	10. 지속가능 식생활 안전식수 위한 기준과 규정 적용		29. 지역푸드 법률/규정, 푸드제어 시스템 평가 강화
	11. 캠페인 수행 자발적이고 규제력 있는 기구 검토		30. 모든 푸드의 권리 실현 위해 공공조달 가능성 활용
	12. 사람중심 전략 시행 건강푸드분야 공동행동 장려		31. 지자체 공공시장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제공
13. 안전식수 공중위생의 보편적 접근 위한 투자	32. 지속가능 생계보장 시장의 인프라 지원 확대/개선		
사회적 형평성	14. 취약계층 건강푸드 접근 위한 현금과 푸드 지원	식품폐기물	33. 비공식 부문의 기여를 인정, 적절한 지원교육 제공
	15. 학교급식 프로그램 단체급식 서비스의 방향 전환		34. 푸드손실 폐기물 감소 평가/모니터 활동가의 소집
	16. 푸드/농업부문 노동환경 개선, 양질 일자리 촉진		35. 특정 대상 목표의 푸드 손실과 낭비 인식 제고 활동
	17. 소외 계층/도시농촌푸드 관련 사회적 연대 활동 장려		36. 연구조사, 교육, 커뮤니티 조직 등 민간부문과 협력
	18. 푸드네트워크 촉진, 풀뿌리 사업 활동 지원		37. 안전/영양푸드소비의 회복과 재분배 용이 푸드 보전
19. 지역활동 강화 참여형 교육/훈련/연구 조사 촉진			

출처 : 황영모 외(2015)

-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정책개입의 근거와 영역 제시
 -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right to food) 차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먹거리의 공공성 강조
 - 이와 함께 먹거리의 기본권 및 정의(justice)를 위한 정책개입의 당위성 및 필요성 제시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sustainable food system)와 지속가능한 식생활(sustainable diet)을 주요 내용으로 한 먹거리정책 개념 제시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모든 시민에게 인권에 기초한 건강하고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 제공,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있으며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낭비를 최소화하는 먹거리 체계를 의미
 - (지속가능한 식생활) 인권에 기초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환경 구축을 의미
- 부문(농촌과 도시, 다양한 부처 등), 지역, 국가 등 다양한 부문이 상호 간 수평적으로 연계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강조
 - 먹거리정책에 있어서 협치를 강조하고 부문 간 협력체계 유형을 제시하며, 특히 철저한 지역 이니셔티브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
 - 밀라노 도시정책협약 우수 도시 사례, 실행을 위한 도시먹거리 정책 프레임 등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협약가입 도시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미국 뉴욕시 먹거리정책¹¹⁾

□ 추진 배경

- 뉴욕시 의회의 제안으로 법제화되어 진행
 - 식량 시스템의 경제적 기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먹거리정책 추진
 - 뉴욕시는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뉴욕시 식품기준(NYC City Food Standards)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매일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 음료 및 과자 자판기들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트랜스 지방, 소금, 설탕 등의 함량을 줄이고 과일 또는 채소를 매끼마다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령 및 공급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 뉴욕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비전으로 행정, 시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약 1여 년간 논의한 끝에 뉴욕시 Food Works가 수립되었으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 후 처리 5단계에 대해 59개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
- 뉴욕시는 먹거리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법제화를 통해 푸드플랜의 성과 반영
 - 정책의 실행과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푸드정책 위원회를 설립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기업과 인프라 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
 - 매년 식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계획 등을 Food Metrics Report를 통해 모니터링

□ Food Forward NYC : a 10-year food policy plan(2021)의 정책목표 및 하위 전략

- 뉴욕시의 계획은 차후 10년간의 계획으로 현재는 『Food Forward NYC : a 10year food policy plan(2021)』 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상태

11) 뉴욕시 먹거리 정책 홈페이지(www1.nyc.gov/site/foodpolicy/index.page)

<표 3-6> 「Food Forward NYC : a 10-year food policy plan(2021)」 정책 목표

구분	정책목표	하위 전략
1	전 뉴욕시민이 건강하고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을 가진다.	· 먹거리 혜택을 더 많은 시민과 장소에 이르도록 확대
		· 유통되는 먹거리를 더 공평하게
		· 식량조달체계는 사회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의 먹거리 조달 법안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포함함
2	뉴욕시의 먹거리 경제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 먹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 수익을 개선할 혁신적 방법 연구
		· 소규모 먹거리 비즈니스를 지원
		· 차세대 먹거리 노동자들을 훈련시킴
3	뉴욕시를 먹거리 공급망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이다.	· 자치구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지역 코디네이션 개선과 먹거리통합센터 홍보
		· 도시농업 증가 지원
4	뉴욕시의 먹거리는 지속가능하도록 생산되고, 유통되고 폐기된다.	·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를 시 먹거리프로그램에 통합
		· 관내 대기오염과 먹거리체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 식품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한 지역사회 비즈니스 혁신 촉진
5	10개년 먹거리정책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와 지식 지원	· 지역 사회 참여 강화 및 지역 간 조화
		· 먹거리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함

주) 14개의 하위전략은 보고서 본래 내용에서 일부만 축약
출처 : New York City_Food Forward NYC : a 10-year food policy plan(2021)

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시 먹거리정책¹²⁾

□ 추진 배경

- 식량공급 실행계획(Food Action Plan)을 통해 먹거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을 제시
 - FAP는 더 많은 시애틀 주민들에게 건강한 음식 제공, 도시에서 먹거리를 재배할

12) 시애틀시 공식 홈페이지의 지속 가능성 & 환경 사무국(Office of Sustainability & Environment) (<https://www.seattle.gov/environment/sustainable-communities/food-access/food-action-plan>)

- 기회 확대, 지역의 식량 경제 강화, 식량 관련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전략 등을 제시
- FAP는 2013년 시장 및 시의회에서 채택한 5개년 계획으로 2018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40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계획 실행의 조정 및 모니터링은 시의 지속가능 경영국 및 환경국에서 담당
- FAP는 시애틀의 식량 시스템이 시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의 기업, 지역사회 조직 및 기타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탄력 있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식량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립

□ 식량공급 실행계획의 4가지 목표와 가치

① 모든 이들을 위한 건강식품(Healthy Food)

- 모든 시애틀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내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식품 이용이 가능
- 도시에서 지원하는 보육원 및 유치원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Farm to Table은 아이들에게 정원 가꾸기 교육을 제공하고 계절 메뉴 개발 및 스크래치 요리에 대한 주방 직원 교육을 제공
- 시애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좋은식품 프로그램(The Seattle Parks and Recreation Good Food Program)은 건강식품,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활발한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장소 만들기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원예, 요리, 청소년 활동 등 제공
- Fresh Bucks to Go Program은 시애틀의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2주에 한 번 신선한 현지 과일 및 채소를 제공
- Fresh Bucks는 시애틀시 모든 농민시장에 최대 10달러의 SNAP/EBT(푸드 스탬프)를 배치해 건강한 과일과 채소를 쉽게 먹을 수 있게 함

② 지역내 생산(Grow Local)

- 지역에서 개인적인 용도 및 사업 목적으로 식량 재배를 쉽게 함
- P-Patch 지역사회 정원 프로그램(P-Patch community garden program)은 시애틀

주변 34에이커의 녹색 공간을 식량 생산 및 지역사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800명이 넘는 P-Patch 참여자는 식량 및 과수 재배, 모임, 아이들의 놀이터 등으로 활용함. P-Patch 참여자는 수확물의 자체 소비는 물론 39,000파운드가 넘는 농산물을 지역 식량은행에 기부

- 자원봉사자는 Orchard Steward Program을 통해 16개 공공 과수원의 나무를 관리하고 열매를 수확함. 2014년에는 4개의 시 부서가 모여 시애틀 농장(Seattle Farms)을 만들어 도시의 상업농들이 시애틀에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시애틀은 King County와의 혁신적인 개발권 파트너십을 통해 시애틀의 농민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17개의 농장을 보호하는 1,100에이커 이상의 King County 농지를 보존하는 데 일조

③ 지역경제 강화(Strengthen the Economy)

- 시애틀은 지역의 건강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
- 시애틀은 도시민과 농민을 직접 연결하는 농민 시장 네트워크를 갖추며, 2016년 시애틀 전역의 농민시장은 현지 식량으로 1,780만 달러 이상을 판매
- P-Patch market gardens program은 매주 농업생산물 직판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 참여자에게 추가적인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건강한 식량을 제공

④ 음식물 쓰레기 방지(Prevent Food Waste)

- 식품 관련 폐기물은 예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하며, 시애틀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가 아닌 퇴비로 재활용되도록 하는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주거용 및 상업용 음식 폐기물 감축을 위해 수거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 2015년 시애틀 공공 유틸리티(Seattle Public Utilities)는 사업장 및 비영리기관과 협력해 가정에서 낭비되는 음식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450명의 주민들을 참여시킨 음식 사랑 폐기방지 프로그램(Love Food, Stop Waste) 시범 사업을 추진

- 식품 폐기물 예방 및 재활용 평가(Food Waste Prevention and Recovery Assessment)는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관해 설명하고 식료품점, 기관 및 식당과 같은 업종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

라. 캐나다 토론토시 먹거리전략¹³⁾

□ 추진 배경

- 인구 200만 명의 토론토는 2010년 먹거리전략 발표
 - 주민들에게 영양가 있고, 가격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공급
 - 주민들의 보건의로 필요성을 축소하여 건강과 복지에 기여
 - 토론토 경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식품 부문의 성장과 발전 강화
 - 시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지역사회와 다양성 축복에 기여

□ 먹거리전략 과제

-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증진을 목표로 한 토론토 시민과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먹거리 전략은 건강, 사회정의, 경제, 환경 및 기후 변화, 지역공동체, 문화 등 6가지 방향에서 과제 도출

① 먹거리 친화적인 지역공동체

먹거리 활동가 확대, 먹거리 활동을 커뮤니티센터에 통합, 먹거리 관련 기존 자산들의 활용, 도시농업 확대,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확대, 저소득층 거주지역 내 신선식품 소매 촉진, 원주민 지역공동체 지원,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② 먹거리는 토론토의 새로운 녹색경제의 핵심

소규모 식품사업체의 창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다양한 요리의 증진을 위한

13) 허남혁(2013)의 “선진국의 도시 먹거리 계획: 캐나다 토론토 사례를 중심으로” 를 참조하여 재정리

이벤트 개최, 먹거리를 녹색 일자리 전략에 포함

③ 토론토에서 굶주림 근절

먹거리 보장과 소득보장의 옹호, 커뮤니티 먹거리센터 확립, 영양 많은 먹거리 공급 확대

④ 주민들을 먹거리 관련 정보와 숙련으로 무장

학교영양 프로그램을 토론토 학교 전체로 확대, 식당 메뉴의 영양정보 제공의 의무화, 먹거리 관련 노하우를 프로그램에 반영, 토양 안전성에 대한 지침 마련, 시의 먹거리 정책을 분명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 학교에서 먹거리의 이해력 증진, 먹거리와 건강을 토론토 신규 이주자에 대한 지원 반영

⑤ 도시와 농촌을 먹거리로 연결

농장에서 학교까지의 연결고리 만들기, 시의 로컬푸드 공공조달 확대, 공역 수준의 지역먹거리 전략을 위해 토론토 인접 지방 정부들과 협력, 지역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연결

⑥ 연방 및 주정부의 건강 중심 먹거리 정책 수립 촉구

마. 프랑스 파리의 지속가능한 식품 계획

□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식품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 측면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환경적인 측면)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은 환경, 생물다양성, 물, 토양 및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유지
 - (경제적인 측면) 지역 식량 공급 기능 회복, 농촌 개발에 기여, 농업고용 지원, 유기농업 오염 예방, 농부들의 건강 보호
 - (사회적인 측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 회복, 먹거리 불평등 감소에 도움, 시립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이 양질의 지역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등

□ 주요 내용

- 파리시는 시립케이터링 서비스(1,200개소, 3천만끼)를 통해 직접 식품 제공
 - 시립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한 식품 제공으로 2008년에 제공된 유기농식품이 7.4%에서 2013년에는 지속가능한 식품이 24.3%(유기농 식품 21.5%)로 증가
 - 2020년까지 시립케이터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50% 제공 목표 설정
- 지속가능한 식품이란 환경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식품
 -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엄격하게 국가, 유럽, 국제표준에 의한 관리를 받음
 - 주요 인증으로 ‘The organic farming label’, ‘The Label Rouge’, ‘The label MSC’, ‘The “Pêche durable” (sustainable fishing) label’이 존재
- 파리의 시립케이터링 서비스는 파리 의회의 결의를 존중하고자 함
 - GM 식품 제로, 100% 방사란, 심해어 제로, 팜오일 제로, 육류제품 20%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 파리의 지속가능한 식품계획의 범위는 파리의 시와 부서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립 레스토랑과 연관
 - 662개 초등학교, 44개 중학교, 12개의 시립 중고등학교 및 3개의 예술학교로 구성된 교육청이 관리하는 721개 사이트
 - 가정과 아동 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약 440개의 아동 시설
 - 파리시 사회행동센터가 운영하는 65개 센터는 가정배달 서비스도 담당
 - 사회활동, 아동 및 건강관리국이 관리하는 14개 부서
 - 시 직원 및 파리 부의 사회행동협의회에서 관리하는 행정 구내식당(17), crop’Pouce 간식 매장(4)

- 3천만 개의 식사가 매년 제공되며 69%는 학교급식과 연관
 - 11%는 유아시설, 10%는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층을 위한 시설, 7%는 파리 노동자를 위한 음식 제공, 2%는 이동복지시설에 제공

4. 지역먹거리계획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가. 시사점

□ 중앙정부 혹은 시 정부 차원의 먹거리 보장 및 안전 중심 정책 강화

- 중앙정부 혹은 시 정부 차원에서 먹거리 보장 및 먹거리 안전 중심의 정책을 강화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정부가 실행하는 체계로 운영, 시 정부는 지역중심의 도농 연결 식품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 뉴욕시의 경우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의 논의 후 시의회에서 푸드시스템을 제안하고 정책 진행
 - 유럽의 경우 먹거리 전략 진행 과정에서 법제화, 전략 방향 설정 등은 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정책으로 반영

□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 지역 순환체계 강화(지역의 관계시장 발전 촉진), 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 등 추진
 - 농정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농정의 대상을 생산자 농업인에서 '소비 주체'까지 포괄하고 생산과 소비,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초점
 - 지역 중심의 다양한 정책 추진 가운데 상당 부문은 지역공동체를 통해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프로그램,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음식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 자체적으로 식품기준을 제정하여 공공급식

식재료에 적용

□ 시민단체 참여가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

- 먹거리계획의 추진은 중앙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을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민단체의 참여가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 시민단체 중심의 비영리단체가 먹거리전략에 대한 세부 사업 실행 및 지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정부와 의회의 구성 형태, 시민단체 거버넌스의 성숙도 등에 따라서 먹거리계획의 진행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

나. 정책적 함의

□ 공공조달의 확대와 강화 필요

-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함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리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먹거리 복지, 사회서비스 등에서 공공조달을 늘려가야 함

□ 실효적인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실행

- 많은 경우 계획이 작동되지 않는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의 상시적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역 먹거리 전략의 목표·과제 등이 다뤄져야 함

□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전제

-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가 지역 먹거리 체계를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결국 주체적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

- 시민사회 단체와 민간의 조직·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다차원적인 정책수단 동원과 통합적 정책 실행

- 먹거리계획은 농업, 소비, 유통, 복지, 환경, 교육 등의 정책영역에 걸친 종합 정책체계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통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특정한 분야의 세부 정책에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임
- 지역먹거리계획은 ‘도시계획, 지역발전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학교급식계획, 식생활교육계획, 환경계획’ 과 같이 계획들이 연계되는 구조가 중요

□ 지역주민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선도사업(leading project)으로 출발

- 규제와 촉진에 관한 정책수단을 동시에 동원하여 사회 시스템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실행계획이므로 구성원의 인식을 확대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갈 적절한 영역의 정책 고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
-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먹거리 전략을 인식하고 생활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도사업(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매개로 주체가 연결되면서 정책 거버넌스의 단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

IV. 관악구 지역 먹거리 환경 분석

1. 먹거리 환경분석 개요

- 지역 먹거리 환경 분석은 관악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을 기준연도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10년의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봄
- 지역 먹거리 선순환과 지역내 먹거리 보장의 2가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함
 - 관악구 먹거리 현황분석은 ‘전통적 먹거리시스템’으로서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재활용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먹거리시스템’으로 접근-영양-안전-분배 등 9개 영역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함
 - 다양한 분야의 문헌자료와 통계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관악구 먹거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부문별 이슈를 도출하는데 활용하였음
 - 이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와 지역내 먹거리 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먹거리계획 과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음

[그림 4-1] 먹거리 현황분석 프레임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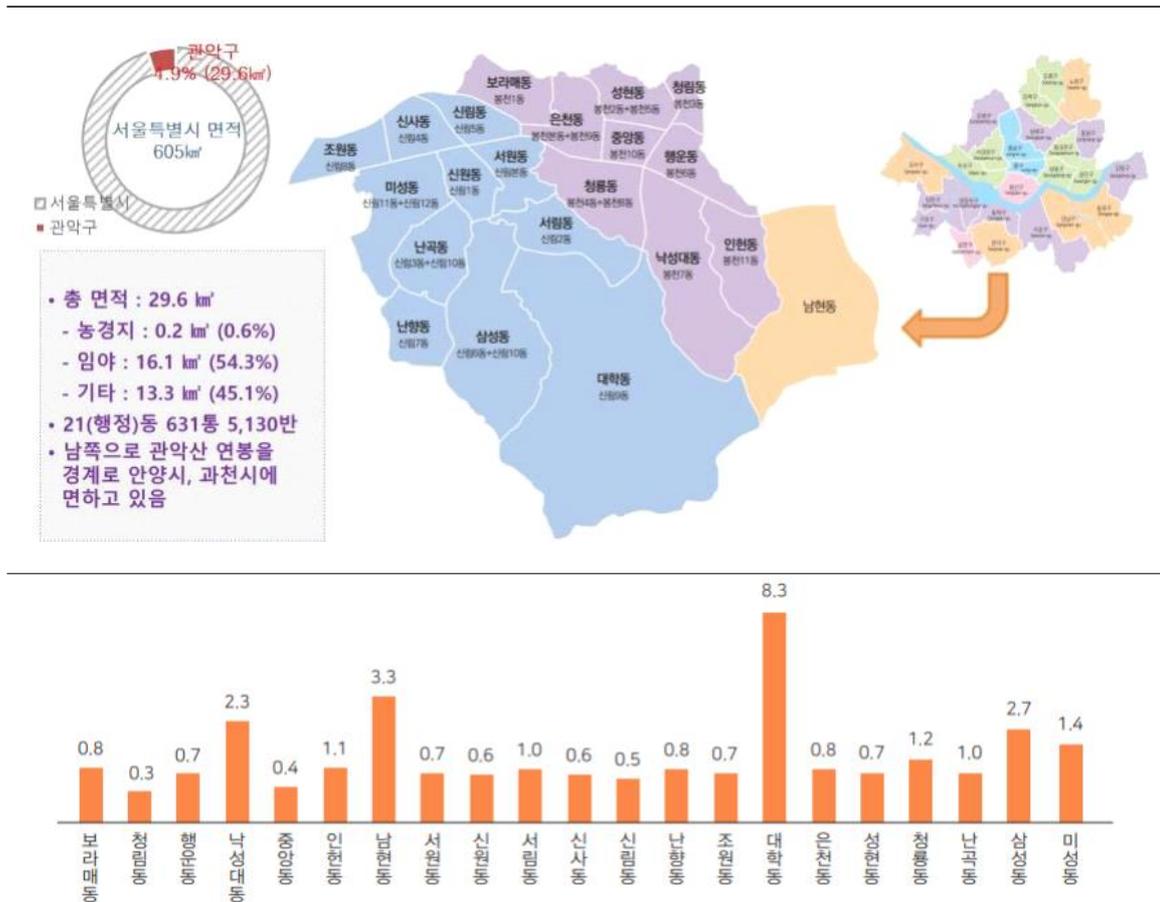
2. 관악구 인구 및 경제 현황

가. 관악구 개황

□ 관악구는 서울시 면적의 4.9%를 차지하며 농경지는 관악구의 0.6%로 낮은 수준임

- 관악구 전체 면적은 29.6km²로 서울시 면적(605km²)의 4.9%를 차지하고, 농경지는 0.2km²로 관악구 면적의 0.6%로 매우 낮은 수준임. 임야는 16.1km²(54.3%), 기타 13.3km²(45.1%)를 차지함
- 행정구역은 21개 행정동, 631통, 5,130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와 연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관악산 연봉을 경계로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에 면하고 있음

[그림 4-2] 관악구 일반현황 및 행정동별 면적 비율(%)



출처: 관악구 통계연보, 통계청 지적통계

□ 주거지는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비율이 비슷하고, 사업체는 39천개소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함

-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7,133세대(44.0%)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43,484세대(33.7%), 다가구주택 14,053세대(10.8%)의 순으로 많음
- 2020년 기준 구내 사업체는 39천개소로 4인이하 사업체가 89.3%, 5~9인이하 사업체가 6.6%를 차지하며, 50인이상 사업체는 0.7%로 비율이 낮음

[그림 4-3] 관악구 주거지 특성 및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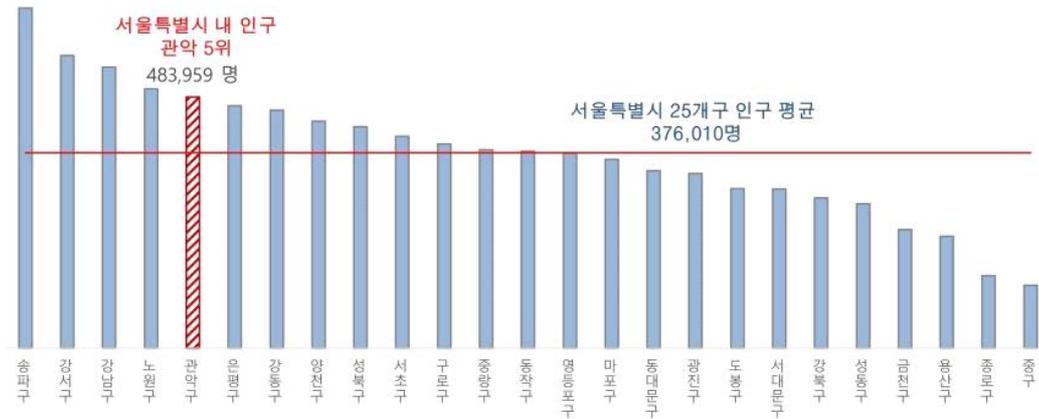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2022), 관악구 기본통계(2021)

나. 인구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규모가 5위이고 청룡동, 은천동, 미성동 등에 거주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밀집도는 청림동, 신림동 순으로 높음

- 2023년 10월 현재 관악구 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5위로 484천명 수준이며, 서울시 평균(376천명) 보다 많음.
- 행정동별로는 청룡동(7.4%), 은천동(6.6%), 미성동(6.1%)의 거주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밀도는 청림동(52,031명/k㎡)이 가장 높고, 신림동(48,938명), 행운동(42,971명), 은천동(41,883명), 신사동(41,770명), 성현동(41,584명) 순으로 밀집도가 높음.

[그림 4-4] 관악구 인구 및 서울시 자치구 순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내국인 기준(2023.10)

□ 관악구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6.6% 감소하였고, 삼성동, 성현동은 감소한 반면 신림동과 청룡동 등은 증가함

- 관악구 인구는 2013년 518천명에서 2023년 484천명으로 6.6% 감소하였음. 삼성동 (△30.7%), 성현동(△17.9%), 난곡동(△17.0%)이 감소한 반면 신림동(19.8%), 청룡동 (9.2%)는 인구가 증가하였음

□ 관악구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6.6% 감소하였고, 삼성동, 성현동은 감소한 반면 신림동과 청룡동 등은 증가함

- 관악구 인구는 2013년 518천명에서 2023년 484천명으로 6.6% 감소하였음. 삼성동 (△30.7%), 성현동(△17.9%), 난곡동(△17.0%)이 감소한 반면 신림동(19.8%), 청룡동 (9.2%)는 인구가 증가하였음

<표 4-1> 행정동별 인구 비중과 인구밀도 현황

구분	인구수 (명)	인구 비중	면적 (㎢)	면적 비중	인구밀도 (명/㎢)
전체	498,433	100.0%		100.0%	16,839
보라매동	24,343	4.9%		2.7%	30,982
청림동	14,866	3.0%	0.29	1.0%	52,031
성현동	28,515	5.7%		2.3%	41,584
행운동	29,466	5.9%		2.3%	42,971
낙성대동	18,012	3.6%		7.7%	7,880
청룡동	36,992	7.4%	1.19	4.0%	31,198
은천동	32,908	6.6%	0.79	2.7%	41,883
중앙동			0.39		
인현동			1.09		
남현동			3.29		
서원동			0.69		
신원동			0.59		
서림동			0.99		
신사동			0.59		
신림동			0.49		
난향동	14,892	3.0%	0.79	2.7%	18,953
조원동	20,957	4.2%		2.3%	30,562
대학동	26,763	5.4%		28.0%	3,230
삼성동	20,206	4.1%		9.1%	7,524
미성동	30,234	6.1%	1.39	4.7%	21,818
난곡동	25,910	5.2%		3.3%	26,286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내국인 기준(2023.10)

주: 1) 보라색은 인구비중 6% 이상, 살구색은 3% 이하 지역을 나타냄

<표 4-2> 행정동별 과거 10년의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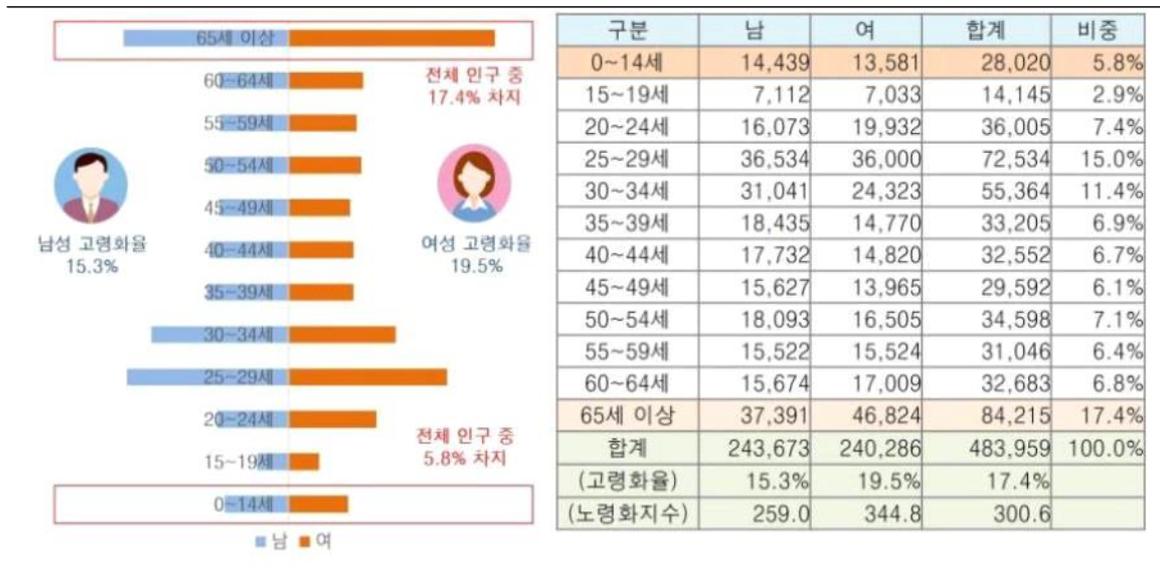
구분	2013(A)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B)	증감 (B-A)/A
보라매동	26,158	25,893	25,678	25,396	25,336	25,230	25,147	24,563	24,412	24,221	23,904	-8.6%
청림동	16,619	16,670	17,000	16,856	16,569	16,384	16,144	15,591	15,118	14,901	14,762	-11.2%
성현동	34,497	34,114	34,066	33,786	33,234	32,810	30,968	30,296	29,209	28,640	28,325	-17.9%
행운동	29,534	29,716	29,793	29,943	29,785	29,876	29,526	29,302	28,931	29,132	28,962	-1.9%
낙성대동	17,754	17,590	17,449	17,354	17,025	16,958	16,876	17,013	16,847	17,334	17,418	-1.9%
청룡동	32,920	32,478	29,045	27,979	28,046	28,789	33,075	35,128	35,422	36,075	35,935	9.2%
은천동	36,027	35,855	35,861	35,356	35,305	35,080	34,671	34,023	33,156	32,710	32,462	-9.9%
중앙동	14,769	14,634	14,795	14,867	15,068	15,284	15,458	15,372	15,106	15,317	15,291	3.5%
인현동	28,235	27,864	27,730	27,640	27,368	26,899	26,703	26,154	25,799	25,725	25,564	-9.5%
남현동	18,123	18,046	18,307	18,773	18,805	18,782	18,780	18,395	18,085	17,962	17,772	-1.9%
서원동	23,525	23,291	23,241	23,069	22,761	23,077	23,194	22,848	22,593	22,786	22,991	-2.3%
신원동	19,215	18,956	18,928	18,908	18,687	18,780	18,510	18,313	17,840	17,847	17,698	-7.9%
서림동	24,457	24,609	24,851	24,821	24,541	24,239	23,727	23,839	23,062	23,436	23,432	-4.2%
신사동	24,697	24,046	23,611	23,297	23,089	23,108	22,862	22,797	22,560	22,646	22,392	-9.3%
신림동	19,177	19,265	19,625	20,321	20,578	21,363	21,645	21,849	22,365	23,081	22,974	19.8%
난향동	17,578	17,338	17,113	16,865	16,752	16,568	16,275	15,799	15,298	14,926	14,768	-16.0%
조원동	18,267	17,859	17,950	18,047	17,820	17,606	17,530	17,558	17,338	19,141	19,608	7.3%
대학동	23,205	23,036	22,958	23,362	23,509	23,824	23,549	23,669	23,385	24,015	24,477	5.5%
삼성동	28,940	28,252	27,978	27,266	26,647	25,878	25,041	23,785	21,902	20,501	20,065	-30.7%
미성동	33,658	33,268	33,371	32,942	32,831	32,552	32,067	31,206	30,512	30,116	29,688	-11.8%
난곡동	30,673	30,406	30,313	30,003	29,541	28,870	28,346	27,560	26,759	26,240	25,471	-17.0%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내국인 기준(2023.10)

□ 대학가 고시촌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으로 20-30대 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화율은 17.4%로 전국 및 서울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2023년 10월 기준 20대(22.4%)와 30대(18.3%)의 인구 비중이 40.7%로 높은 수준이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그림 4-5]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내국인 기준(2023.10)

- 주: 1) 고령화율은 고령인구(65세이상)/전체인구로 14~20%는 ‘고령사회’로 구분
- 2) 노령화지수는 고령인구(65세이상)/유소년인구(14세이하)×100으로 산정함

□ 행정동별 고령화율과 노령화 지수

- 2022년 기준 행정동별로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곳은 5개동이었고, 신림동의 경우는 고령화율은 8.8%였으나, 노령화지수는 546.1로 관악구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매우 적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의 정책상 별도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 행정동별 고령화율과 노령화지수

구분	총인구수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율	노령화지수
전체				
보라매동	23,904	4,818	20.2%	315.1
청림동			19.8%	188.1
성현동	28,325	5,700	20.1%	201.5
행운동			15.8%	328.9
낙성대동			11.8%	242.7
청룡동			13.4%	292.3
은천동			19.2%	220.9
중앙동			16.2%	444.8
인현동			16.5%	296.4
남현동			17.2%	284.7
서원동			15.0%	421.3
신원동			19.0%	482.7
서림동			16.3%	376.0
신사동			16.3%	391.5
신림동	22,974	2,026	8.8%	546.1
난향동			19.9%	191.6
조원동			16.0%	298.5
대학동			13.4%	351.9
삼성동	20,065	5,640	28.1%	505.8
미성동	29,688	6,277	21.1%	275.2
난곡동	25,471	5,742	22.5%	360.0

출처: 관악구, 통계청

□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2.9% 수준이고, 2019년 대비 △16.0% 감소하였음.

- 2022년 기준 관내 거주 외국인인 14천명, 2.9% 수준임. 전체 외국인 중에 대학동 (15.8%)와 신사동(14.3%)에 집중 거주하고 있음
- 2019년 대비 외국인 거주자는 △16% 감소하였지만 대학동(152%), 서림동(51%)은 증가하였고, 보라매동(△67.5%)과 신원동(△37.3%), 신사동(△33.1%) 등은 감소함

<표 4-4> 외국인 비중 및 연도별 변화 추이(명, %)

외국인 비중 현황(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변화 추이					
구분	총인구 (A)	외국인 (B)	외국인 비중	총인구대비 비중 (B/A)	구분	2019(A)	2020	2021	2022(B)	증감(B-A)/A
전체	498,433	14,474	100.0%	2.9%	전체	17,240	14,743	13,750	14,474	-16.0%
보라매동	24,343	439	3.0%	1.8%	보라매동	1,349	714	506	439	-67.5%
청림동	14,866	104	0.7%	0.7%	청림동	142	120	96	104	-26.8%
성현동	28,515	190	1.3%	0.7%	성현동	207	176	185	190	-8.2%
행운동	29,466	504	3.5%	1.7%	행운동	535	497	482	504	-5.8%
낙성대동	18,012	594	4.1%	3.3%	낙성대동	747	566	587	594	-20.5%
청룡동	36,992	1,057	7.3%	2.9%	청룡동	1,365	1,197	1,060	1,057	-22.6%
은천동	32,908	446	3.1%	1.4%	은천동	666	573	475	446	-33.0%
중앙동	15,659	368	2.5%	2.4%	중앙동	437	386	381	368	-15.8%
인현동	25,958	394	2.7%	1.5%	인현동	385	346	355	394	2.3%
남현동	17,973	201	1.4%	1.1%	남현동	200	203	189	201	0.5%
서원동	23,716	725	5.0%	3.1%	서원동	874	717	685	725	-17.0%
신원동	18,471	773	5.3%	4.2%	신원동	1,232	977	835	773	-37.3%
서림동	24,357	925	6.4%	3.8%	서림동	612	571	627	925	51.1%
신사동	24,465	2,073	14.3%	8.5%	신사동	3,098	2,629	2,278	2,073	-33.1%
신림동	23,770	796	5.5%	3.3%	신림동	880	818	763	796	-9.5%
난향동	14,892	124	0.9%	0.8%	난향동	119	116	122	124	4.2%
조원동	20,957	1,349	9.3%	6.4%	조원동	2,049	1,674	1,448	1,349	-34.2%
대학동	26,763	2,286	15.8%	8.5%	대학동	908	1,238	1,536	2,286	151.8%
삼성동	20,206	141	1.0%	0.7%	삼성동	185	150	139	141	-23.8%
미성동	30,234	546	3.8%	1.8%	미성동	684	581	544	546	-20.2%
난곡동	25,910	439	3.0%	1.7%	난곡동	566	494	457	439	-22.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10).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2022)

□ 관악구의 지방소멸지수는 1.128로 ‘소멸위험 보통’ 지역에 해당. 소멸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행정동별로 소멸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2023년 10월 기준 지방소멸지수는 1.128로 2017년 1.317에 비해 0.189포인트 낮아졌고, 연차별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 행정동별로는 삼성동이 0.359로 ‘소멸위험단계’에 있고(2019년에 처음 진입), 난향동, 난곡동, 성현동, 미성동, 청림동, 은천동, 보라매동이 ‘주의단계’에 있음.
- 반면 서원동, 행운동, 중앙동, 청룡동, 낙성대동, 신림동은 소멸지수가 1.5이상으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분류됨

□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47.0% 증가해 전국 및 서울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관악구의 1인가구는 2012년 119천호에서 2022년 175천호로 47.0%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증가율 30.2%, 전국 증가율 44.3%를 상회하는 수준임
- 2022년 기준 행정동별로는 신림동(85.2%), 대학동(77.0%)이 높고, 청림동(33.0%), 성현동(34.5%)은 낮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함.
- 2016년 대비 청룡동(62.2%), 신원동(54.6%) 크게 증가한 반면 청림동(10.4%), 난향동(13.4%), 삼성동(-3.9%)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감소하였음

<표 4-6> 1인 가구 변화 추이 비교 및 가구 구성원 비중(천호, %)

구분	2012(A)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B)	증감(B-A)/A
관악구(c)	118.7	120.5	121.8	124.2	128.7	133.9	142.7	151.2	160.3	165.8	174.5	47.0%
서울특별시(d)	1,500	1,510	1,526	1,539	1,562	1,609	1,679	1,755	1,859	1,907	1,953	30.2%
전국(e)	6,737	6,878	7,050	7,243	7,447	7,725	8,086	8,489	9,063	9,462	9,724	44.3%
c/d	7.9%	8.0%	8.0%	8.1%	8.2%	8.3%	8.5%	8.6%	8.6%	8.7%	8.9%	1.0%
d/e	22.3%	22.0%	21.6%	21.3%	21.0%	20.8%	20.8%	20.7%	20.5%	20.2%	20.1%	-2.2%

구분	전체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관악구	100.0%	61.5%	18.1%	10.6%	7.6%	1.7%	0.4%	0.1%
서울특별시	100.0%	43.9%	22.2%	16.8%	13.4%	2.9%	0.6%	0.1%
전국	100.0%	41.0%	24.2%	16.9%	13.7%	3.3%	0.6%	0.1%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

<표 4-7> 행정동별 1인 가구 현황 및 변화 추이

행정동별 1인가구 현황(2022년)				연도별 행정동별 1인가구 변화추이								
구분	전체 가구수	1인 가구수	1인가구 비중(A)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B)	증감(B-A)/A
전체	283,623	174,511	61.5%	전체	128,682	133,850	142,742	151,175	160,288	165,811	174,511	35.6%
보라매동	13,096	7,127	54.4%	보라매동	4,744	5,017	5,481	5,881	6,282	6,852	7,127	50.2%
청림동	6,425	2,119	33.0%	청림동	1,919	1,931	1,976	1,980	2,108	2,103	2,119	10.4%
성현동	12,263	4,226	34.5%	성현동	3,424	3,606	3,867	3,790	4,176	4,144	4,226	23.4%
행운동	18,196	12,152	66.8%	행운동	9,144	9,561	10,125	10,541	10,991	11,530	12,152	32.9%
낙성대동	11,871	8,834	74.4%	낙성대동	6,884	6,910	7,180	7,576	7,956	8,159	8,834	28.3%
청룡동	24,210	17,689	73.1%	청룡동	10,903	11,492	12,949	14,777	15,802	16,770	17,689	62.2%
은천동	16,073	7,603	47.3%	은천동	5,537	5,741	6,233	6,735	7,200	7,459	7,603	37.3%
중앙동	10,146	7,209	71.1%	중앙동	4,823	5,237	5,666	6,168	6,577	6,815	7,209	49.5%
인현동	14,745	8,880	60.2%	인현동	6,736	7,031	7,355	7,706	8,034	8,404	8,880	31.8%
남현동	9,856	5,579	56.6%	남현동	4,064	4,205	4,482	4,727	5,033	5,307	5,579	37.3%
서원동	14,764	10,113	68.5%	서원동	7,158	7,420	8,023	8,769	9,152	9,592	10,113	41.3%
신원동	11,311	7,523	66.5%	신원동	4,865	5,219	5,778	6,191	6,789	7,039	7,523	54.6%
서림동	14,986	10,252	68.4%	서림동	8,729	8,876	9,043	9,096	9,705	9,594	10,252	17.4%
신사동	14,421	9,808	68.0%	신사동	6,494	6,982	7,681	8,151	8,825	9,217	9,808	51.0%
신림동	18,890	16,087	85.2%	신림동	11,533	11,977	12,886	13,623	14,342	15,131	16,087	39.5%
난향동	6,198	1,980	31.9%	난향동	1,746	1,757	1,865	1,925	2,015	1,972	1,980	13.4%
조원동	11,881	7,721	65.0%	조원동	5,495	5,803	6,055	6,481	6,932	7,127	7,721	40.5%
대학동	16,977	13,078	77.0%	대학동	10,537	10,830	11,488	11,696	12,190	12,191	13,078	24.1%
삼성동	9,853	4,205	42.7%	삼성동	4,376	4,367	4,510	4,700	4,805	4,448	4,205	-3.9%
미성동	14,430	6,387	44.3%	미성동	4,915	5,074	5,282	5,485	5,775	6,066	6,387	29.9%
난곡동	13,031	5,939	45.6%	난곡동	4,656	4,814	4,817	5,177	5,599	5,891	5,939	27.6%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

나. 산업 및 경제 현황

□ 2020년 기준 관악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조1,387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21위를 기록함

-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17.2%로 가장 높고, 부동산임대업(16.0%), 사업서비스업(10.9%) 순이며, 농림어업 총생산액은 미미한 수준임.

<표 4-8>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 및 산업별 생산액(2020년)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2020년)				산업별 지역내총생산과 특화계수(2020년)				
구분	GRDP(백만원)	비중	순위	구분	당해년가격	비중	특화계수	
서울특별시	444,544,909	100.0%					시도대비	전국대비
종로구	33,893,980	7.6%	5	지역내총생산	6,138,754	100.0%		
중구	56,070,505	12.6%	2	농림어업	491	0.0%	0.1	0.0
용산구	12,824,348	2.9%	11	광업	-	0.0%	-	-
성동구	12,422,960	2.8%	12	제조업	138,388	2.3%	0.7	0.1
광진구	6,451,227	1.5%	1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80,695	1.3%	3.1	0.9
동대문구	7,399,775	1.7%	15	건설업	287,107	4.7%	1.5	0.9
중랑구	4,750,297	1.1%	23	도매및소매업	490,802	8.0%	0.6	1.2
성북구	6,193,208	1.4%	20	운수및창고업	104,247	1.7%	0.8	0.6
강북구	3,356,956	0.8%	25	숙박및음식점업	317,531	5.2%	2.4	2.6
도봉구	3,499,358	0.8%	24	정보및통신업	526,751	8.6%	0.7	1.8
노원구	6,438,328	1.4%	19	금융및보험업	133,039	2.2%	0.2	0.4
은평구	5,076,529	1.1%	22	부동산업및임대업	979,869	16.0%	1.5	2.1
서대문구	8,611,066	1.9%	14	사업서비스업	668,111	10.9%	0.7	1.2
마포구	20,199,596	4.5%	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206,007	3.4%	0.9	0.5
양천구	7,012,123	1.6%	16	교육서비스업	1,053,221	17.2%	3.9	3.6
강서구	16,811,352	3.8%	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56,700	7.4%	1.5	1.6
구로구	13,924,846	3.1%	10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71,447	4.4%	1.7	1.7
금천구	17,221,771	3.9%	8					
영등포구	39,433,365	8.9%	3					
동작구	6,650,824	1.5%	17					
관악구	6,138,754	1.4%	21					
서초구	36,249,662	8.2%	4					
강남구	74,260,359	16.7%	1					
송파구	30,336,592	6.8%	6					
강동구	9,317,128	2.1%	13					

출처: 서울시 통계

□ 관악구내 사업체는 38천개, 종사자수는 14만명 수준이고, 서울시와 비교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수준임

- 2020년 기준 사업체는 38,639개소이고 종사자수는 136천명 수준임. 행정동별로는 청룡동(2,900개소), 조원동(2,693개소), 신림동(2,449개소), 은천동(2,416) 순으로 많음
- 2020년 기준 외식업체는 6,329개소, 종사자는 15,45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대학동(699개소), 신림동(670개소), 낙성대동(583개소) 순으로 많음

- 2022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서울시(62.5%)보다 낮으며, 실업률은 4.7%로 서울시 3.4%보다 높고 고용률은 58.4%로 서울시(60.4%) 보다 낮음.

<표 4-9> 사업체와 종사자 및 외식숙박업 현황(2020년)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개소,명)			외식업 현황(개소,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38,639	135,681	합계	6,329	15,455
보라매동	2,095	7,035	보라매동	301	662
청림동	702	1,715	청림동	87	157
성현동	1,325	3,548	성현동	101	198
행운동	2,150	7,642	행운동	303	690
낙성대동	2,036	9,000	낙성대동	583	2,061
청룡동	2,900	11,993	청룡동	455	1,214
은천동	2,416	8,271	은천동	327	718
중앙동	1,724	8,719	중앙동	249	598
인현동	1,740	4,784	인현동	229	543
남현동	1,514	10,801	남현동	258	745
서원동	1,924	7,852	서원동	450	1,433
신원동	1,209	2,614	신원동	219	362
서림동	1,521	3,267	서림동	249	470
신사동	2,056	4,897	신사동	274	468
신림동	2,449	6,196	신림동	670	1,549
난향동	674	2,141	난향동	40	81
조원동	2,693	7,454	조원동	378	858
대학동	2,277	15,271	대학동	699	1,750
삼성동	1,461	3,104	삼성동	123	199
미성동	2,305	6,226	미성동	216	445
난곡동	1,468	3,151	난곡동	118	254

출처: 관악구, 통계청

[그림 4-7] 연도별 경제활동 지표 변화 추이



구분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	증감(B-A)	
서울특별시	경제활동참가율	62.3	63.3	62.6	62.6	63.1	62.6	62.7	62.1	62.3	62.5	0.2
	실업률	3.9	4.4	4.2	4.2	4.5	4.8	4.4	4.6	4.8	3.4	-0.5
	고용률	59.9	60.5	60.0	60.0	60.2	59.6	60.0	59.3	59.2	60.4	0.5
	(청년고용률)	42.7	42.9	43.8	44.6	45.3	46.1	47.5	46.6	50.5	51.5	8.8
관악구	경제활동참가율									58.0	61.3	61.3
	실업률									6.1	4.7	4.7
	고용률									54.4	58.4	58.4
	(청년고용률)									49.7	56.3	56.3

출처: 통계청

주: 통계청 DB에 관악구의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청년고용률 등 자료 없음

□ 서울시 25개 자지구 가운데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22위, 재정자주도는 19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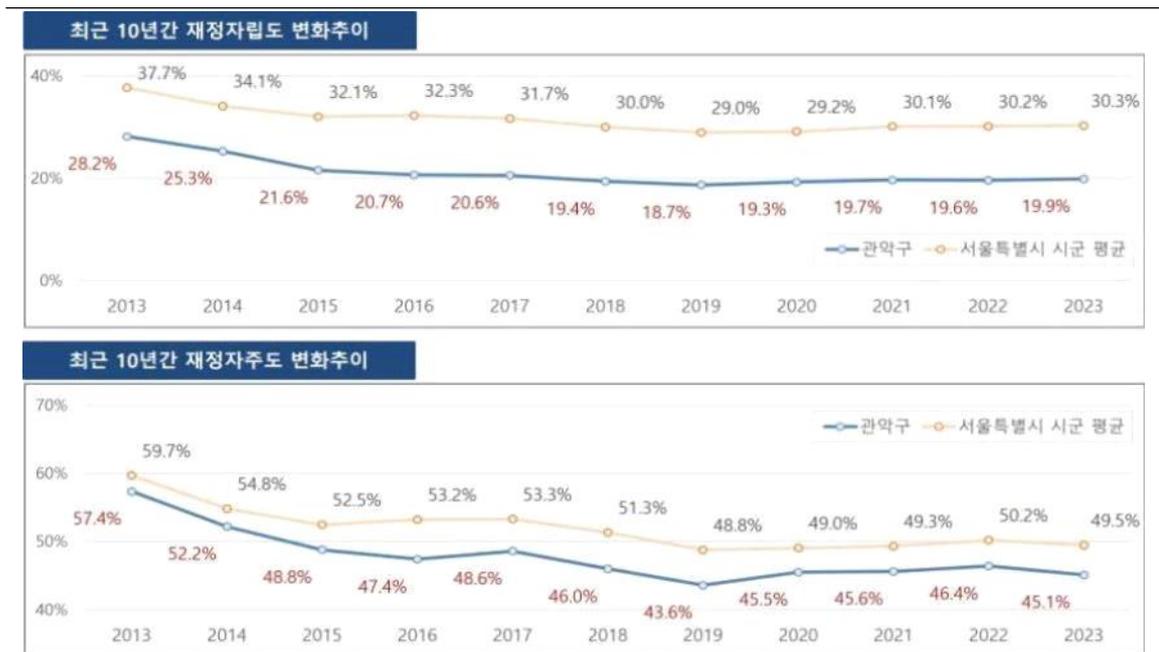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19.9%로 25개 자지구 가운데 22위, 재정자주도는 45.1%로 19위를 기록함.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

[그림 4-8]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2023)

[그림 4-9]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2023)

3. 관악구 먹거리 생산기반 현황

가. 농업 기반 현황

□ 관악구의 등록 농업인은 916명이지만 실제 영농종사 인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

- 2022년 기준 관악구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916명(경영주 789, 구성원 127)으로 관악구 인구의 0.2%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등록 농업인 중에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는 3가구이고 모두 65세 이상임

[그림 4-10] 관악구 등록 농업인 현황



출처: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표 4-10> 관악구 농업경영체 현황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		2022(B)		증감 (B-A)/A
	경영체수	비중	경영체수	비중	경영체수	비중	경영체수	비중	경영체수	비중	경영체수	비중	
합계	5	100.0%	5	100.0%	5	100.0%	4	100.0%	2	100.0%	3	100.0%	-40.0%
봉천동	2	40.0%	2	40.0%	2	40.0%	1	25.0%	0	0.0%	0	0.0%	-100.0%
남현동	1	20.0%	1	20.0%	1	20.0%	1	25.0%	1	50.0%	1	33.3%	0.0%
신림동	2	40.0%	2	40.0%	2	40.0%	2	50.0%	1	50.0%	2	6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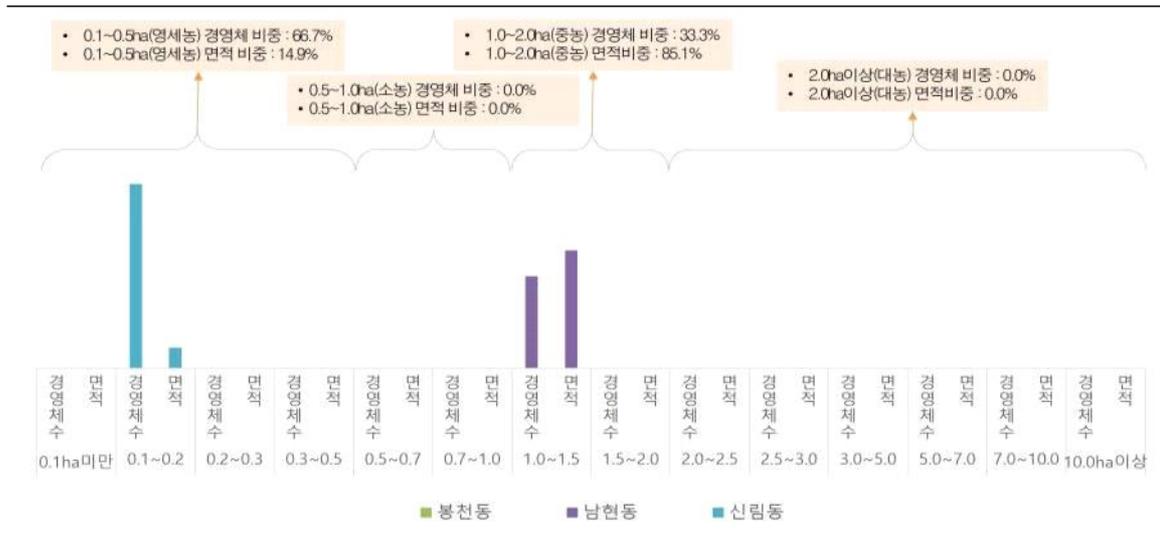
구분		2015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B)	증감 (B-A)/A
서울특별시	경영체수	2,167	2,093	2,033	1,982	1,950	1,942	1,878	1,960	-6.4%
	65세 이상 경영체수	1,089	1,074	1,102	1,098	1,111	1,140	1,101	1,150	7.1%
	65세 이상 비중	50.3%	51.3%	54.2%	55.4%	57.0%	58.7%	58.6%	58.7%	(7.4%p)
관악구	경영체수	5	5	5	5	5	4	2	3	-40.0%
	65세 이상 경영체수	3	3	3	3	3	3	2	3	0.0%
	65세 이상 비중	60.0%	60.0%	60.0%	60.0%	60.0%	75.0%	100.0%	100.0%	(40.0%p)

출처: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농업경영체는 신림동, 남현동 등에 거주하고 대부분 2ha 미만 중소농가임

- 2022년 기준 농업경영체의 경작면적은 모두 2ha 미만의 중소농이며, 노지재배 비중이 88% 이상을 차지함.

[그림 4-11] 규모별 농업경영체 현황



출처: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그림 4-12] 시설 및 노지재배 현황



구분	2015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B)	증감(B-A)/A
전체 재배면적	4.4	4.4	4.4	4.4	3.7	1.9	1.4	1.9	-55.8%
시설 재배면적	0.7	0.7	0.7	0.7	0.4	0.2	0.0	0.2	-66.5%
노지 재배면적	3.7	3.7	3.7	3.7	3.2	1.7	1.4	1.7	-53.8%
시설 비중	15.4%	15.4%	15.4%	15.4%	11.5%	11.6%	0.0%	11.6%	(-3.7%p)
노지 비중	84.6%	84.6%	84.6%	84.6%	88.5%	88.4%	100.0%	88.4%	(3.7%p)

출처: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2015년 대비 경작면적은 전반 이상 감소하였고, 과일 생산 비중이 높음

- 2015년 대비 2020년 경작면적은 △55.8% 감소하였고, 2020년 현재 남현동이 경작면적의 66.3%를 차지함.
- 2022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면적 기준)은 복숭아, 사과, 자두, 매실 순으로 재배면적이 많으며, 과일류가 전체 품목의 85.1%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4-11> 행정동별 재배면적 변화추이(ha)

구분	2015(A)		2016		2017		2018		2019		2020(B)		증감 (B-A)/A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봉천동	1.1	25.8%	1.1	25.8%	1.1	25.8%	1.1	25.8%	0.5	14.3%	0.2	11.6%	
남현동	2.8	64.5%	2.8	64.5%	2.8	64.5%	2.8	64.5%	2.7	74.1%	1.3	66.3%	
신림동	0.4	9.7%	0.4	9.7%	0.4	9.7%	0.4	9.7%	0.4	11.6%	0.4	22.0%	

출처: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그림 4-13] 상위 10대 품목 재배현황



구분	복숭아	사과	자두	매실	블루베리	배추	상추	열무	호박	건고추	10대 품목 합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재배면적	0.56	0.40	0.20	0.12	0.10	0.03	0.02	0.02	0.01	0.01	1.48
10대품목 중 비중	37.7%	27.1%	13.5%	8.2%	6.8%	1.7%	1.7%	1.7%	0.8%	0.8%	100.0%
전체품목 중 비중	37.1%	26.6%	13.3%	8.1%	6.7%	1.7%	1.7%	1.7%	0.8%	0.8%	98.4%

출처: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상위 10대 품목의 생산액은 38톤, 1억1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생산액의 99.2%를 차지함.

- 2022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생산량은 38.4톤, 생산액은 111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서울시 대비 복숭아, 사과, 자두는 특화계수가 높음
- 은행은 재배면적은 작지만 생산액이 높아 10대 품목에 포함됨

<표 4-12> 상위 10대 품목 생산현황 및 특화계수

관악구 상위 10대 농산물 생산현황(2022년)						서울특별시 대비 특화계수(2022년)				
순위	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액비중 (%)	순위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1	은행	0.00	19.8	59.5	53.0%	1	은행	0.0	3.1	2.3
2	복숭아	0.56	5.2	16.8	14.9%	2	복숭아	70.4	44.1	33.8
3	사과	0.40	6.5	13.8	12.3%	3	사과	46.4	29.1	22.3
4	블루베리	0.10	0.5	9.5	8.5%	4	블루베리	9.7	6.1	4.6
5	자두	0.20	1.6	5.0	4.5%	5	자두	47.4	29.7	22.7
6	상추	0.02	0.7	2.2	2.0%	6	상추	0.9	0.9	0.7
7	배추	0.03	2.5	2.0	1.8%	7	배추	0.6	0.4	0.3
8	매실	0.12	0.8	1.5	1.3%	8	매실	2.4	1.5	1.1
9	호박	0.01	0.4	0.8	0.7%	9	호박	1.0	0.6	0.5
10	열무	0.02	0.2	0.4	0.3%	10	열무	2.4	1.5	1.2
전품목 대비 비중		97.5%	99.2%	99.2%						

출처: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표 4-13> 상위 10대 품목별 재배면적 변화추이(ha)

품목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B)		증감 (B-A)/A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복숭아	1.00	26.5%	1.00	26.5%	1.00	26.5%	1.00	31.8%	0.56	32.7%	0.56	39.7%	0.56	37.1%	-44.3%
사과	0.99	26.2%	0.99	26.2%	0.99	26.2%	0.90	28.6%	0.40	23.5%	0.40	28.5%	0.40	26.6%	-59.5%
자두	0.20	5.3%	0.20	5.3%	0.20	5.3%	0.20	6.4%	0.20	11.7%	0.20	14.3%	0.20	13.3%	0.0%
매실	0.62	16.5%	0.62	16.5%	0.62	16.5%	0.62	19.8%	0.12	7.1%	0.12	8.6%	0.12	8.1%	-80.5%
블루베리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10	6.7%	0.0%
배추	0.18	4.8%	0.18	4.8%	0.18	4.8%	0.03	0.8%	0.03	1.5%	0.00	0.0%	0.03	1.7%	-86.1%
상추	0.06	1.7%	0.06	1.7%	0.06	1.7%	0.06	2.0%	0.06	3.7%	0.02	1.8%	0.02	1.7%	-60.1%
열무	0.02	0.7%	0.02	0.7%	0.02	0.7%	0.02	0.8%	0.02	1.5%	0.02	1.8%	0.02	1.7%	0.0%
호박	0.24	6.4%	0.24	6.4%	0.24	6.4%	0.01	0.4%	0.01	0.7%	0.01	0.9%	0.01	0.8%	-94.8%
대파	0.05	1.3%	0.05	1.3%	0.05	1.3%	0.05	1.6%	0.05	2.9%	0.01	0.9%	0.01	0.8%	-75.2%

출처: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관악구의 친환경 및 GAP 생산기반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2022년 기준 친환경(무농약) 생산농가는 2가구, GAP 인증농가는 1가구임

<표 4-14> 관악구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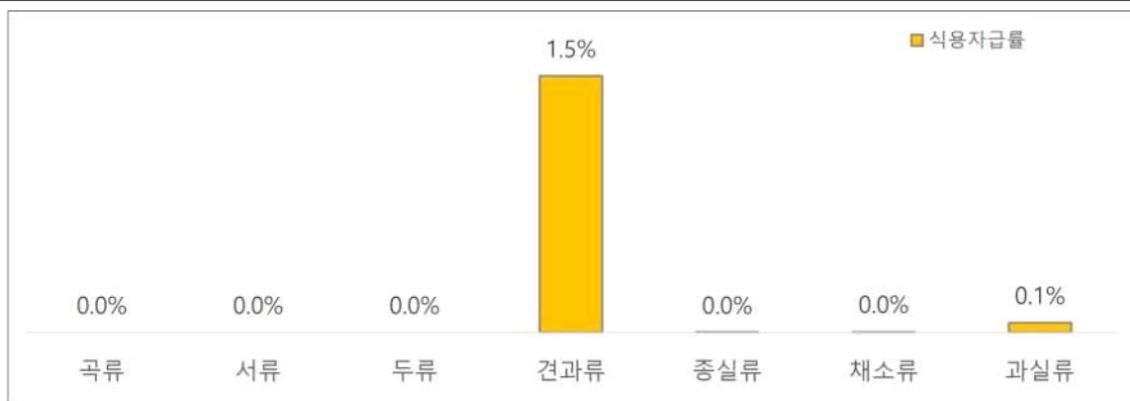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	증감 (22/15)	
서울특별시	유기농산물	농가수	6	4	4	6	7	9	7	9	50.0%
		면적	1	0	0	0	0	0	0	0	-100.0%
	무농약농산물	농가수	62	63	63	59	69	67	55	63	1.6%
		면적	13	12	15	21	25	22	20	19	44.4%
서울특별시 친환경 농업 농가수		68	67	67	65	76	76	62	72		
서울특별시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14	12	15	21	25	22	20	19		
관악구	유기농산물	농가수	0	0	0	0	0	0	0	0	0.0%
		면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농약농산물	농가수	1	1	1	0	0	0	2	2	100.0%
		면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악구 친환경 농업 농가수		1	1	1	0	0	0	2	2		
관악구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출처: 통계청, 친환경인증농산물출하현황

□ 관악구는 관내 생산기반이 약해 식용자급률이 미미한 수준임

- 2022년 기준 관악구의 식용자급률은 견과류 1.5%, 과실류 0.1%를 제외하면 대부분 품목이 관내 생산이 안되고 있음

[그림 4-14] 관악구 부류별 식용자급률 추정(2022년)



구분	곡류	서류	두류	견과류	종실류	채소류	과실류
생산량	0	0	0	20	0	4	15
총소비량	194,503	8,985	14,442	1,478	1,384	93,975	27,203
식용소비량	85,555	7,376	14,442	1,364	1,384	93,975	26,009
전체자급률	0.0%	0.0%	0.0%	1.3%	0.0%	0.0%	0.1%
식용자급률	0.0%	0.0%	0.0%	1.5%	0.0%	0.0%	0.1%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 자체 추정.

주: 식용소비량=식용공급량+식용가공량+감모량 할당분으로 산정

□ 관악구는 도시농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도시농업 시설은 도시텃밭, 양봉장, 도시농업공원, 도시농업센터, 서울형 텃밭 등 다양한 유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도시농업 시설을 통해 텃밭 분양 및 조성, 상자텃밭 등 보급, 농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도시 양봉장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도시농업 시설	강감찬 텃밭 등 도시텃밭 10개소, 양봉장 2개소, 농업공원 1개소, 도시농업센터 2개소, 서울형 텃밭(싱싱, 치유, 학교, 어린이, 옥상텃밭 등) 150개소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 분양 및 조성, 보급사업(상자텃밭, 퇴비), 농업관련 프로그램 20여종 운영 ○ 도시양봉장 설치 및 양봉 프로그램 운영 ○ 리얼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반려식물 보급사업 등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도시농업공원 유아자연배움터	
			
			

<표 4-15> 관악구 도시농업 주요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개수	면적(㎡)	세부내용	조성년도 (운영연도)
	합계	119개소	51,968		
자투리 텃밭	강감찬텃밭 등	10개소	24,716㎡	노지형, 분양	
서울형 텃밭	싱싱텃밭	20개소	1,010㎡	〃	
	치유테밭 (구 싱싱텃밭)	3개소	1,598㎡	노지텃밭(2021) 상자텃밭(2022)	
	학교텃밭	30개소	3,802㎡	노지텃밭 상자텃밭	
	어린이텃밭	12개소	718㎡	노지텃밭(2021) 상자텃밭(2022)	
	옥상텃밭	47개소	3,762㎡	〃	
상자텃밭		10,390개			
도시양봉	낙성대양봉장	1개소	150㎡	12통	2015.5.
	도시농업공원	1개소	20㎡	3통	2020.4.
스마트팜	관악도시농업연구소 (리얼스마트팜)	1개소	288㎡	온실1통	2017.5 (2017.6.)
도시농업 공원 (지원센터)	관악도시농업공원 (관악도시농업센터)	1개소	15,000㎡	경작체험원 허브원, 유아숲터 도시농업센터	2019.7. (2019.9.)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1개소	904㎡	다목적교육장, 온실, 전시관 등	2021.1. (2021.5.)

출처: 관악구청 내부자료

<표 4-16> 관악구 학교터발 조성현황

구분	계	2013 이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면적(㎡)	3,802	587	-	657	183	368	1,198	424	385	-
개소	30	6	-	2	2	5	7	5	3	-

출처: 관악구청 내부자료

<표 4-17> 관악구 학교터발 세부현황

연번	연도	단체(시설명)	주 소	면적(㎡)	소요예산(원)	비 고
4	2014	인헌고등학교	인헌9길 74		14,448,100	2개소 (283m ²)
5		성보고등학교	남부순환로156길 39	33	8,705,600	
6		관악초등학교	청룡4길 49	250	15,000,000	
7		영락고등학교	청룡16길 25	214	32,599,000	
			봉천로 21길 108			
			호암로498			
			신림로114			
			광신길 237길 60	50	28,148,000	
			호암로 546	30		
		서울미술고등학교	남부순환로 247길 26	74	36,605,000	
		봉원중학교	관악로 24가길 15	200		
		신림중학교	신림로 40	540	42,396,000	
		난우초등학교	난우길 40	100		
		신성초등학교	신림로 114	204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관악로 1	30	74,000,000	
		인헌초등학교	낙성대로 23	43		
		광신중학교	광신길 141	81		
		삼성중학교	신림로3가길 39-24	78		
		관악중학교	남부순환로237길 60	192		
		남부초등학교	남부순환로 163길 14	185	45,000,000	
		구암초등학교	구암길 1	100		
		사당초등학교	남현4길 51	100		

출처: 관악구청 내부자료

나. 먹거리 가공 및 유통 기반

□ 먹거리 유통 기반으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로컬푸드직매장, 푸드뱅크마켓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은 2009년 6월 개장하였고, 현대화된 소매유통 시설을 기반으로 도시농협의 우수 판매사업 사례로 지역 농산물 판매 역할 담당
- 관악농협은 관내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일산농협과 연계하여 로컬푸드직매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푸드뱅크마켓 1개소가 운영 중임.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6월 개장 ○ 부지 5,004㎡, 연건평 2만9,752㎡ ○ 지상 6층, 지하 5층 ○ (지상1층+지하1층) 농축산물 판매장 (2~5층) 일반매장, 푸드코트, 문화센터 등 ○ 연간매출('22) : 492억원(하나로마트 포함) 	

일산농협 로컬푸드코너 관악보라매점	일산농협 로컬푸드코너 관악중앙점	일산농협 로컬푸드 관악신우점
관악구 보라매로 12 (관악농협)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관악구 호암로 529 (우영맨션 1층)
		

명칭	주소	연락처	
관악푸드뱅크마켓	관악구 신림로 58길 12	02-872-1377	
<p>잉여 식품을 기탁 받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단기보호센터, 노숙인 쉼터 등 기부식품 지원(학교 및 단체 급식소로부터 기부받은 음식을 검수 후 무상 제공)</p>			

4. 관악구 먹거리 소비 현황

가. 먹거리 소비량 추정

□ 관악구 주민의 먹거리 소비량은 연간 200천톤으로 추정됨

- 2023년 10월 관악구 인구 기준 연간 식품 소비량은 200,852톤으로 추산되며, 농산물류가 142천톤, 축산물류 33천톤, 수산물류 12천톤, 기타가공식품 14천톤으로 추정됨.
- 일반인이 158천톤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자 28천톤, 초중고교 11천톤을 소비할 것으로 추정됨

<표 4-18> 관악구 연령별 식품수요 추정량 (2023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일반인	고령인	합계 (명,톤/년)
	≤3세	4~6세	7~18세	19~64세	≥65세	
인구수	5,645	4,879	27,878	361,342	84,215	483,959
농산물류	762	849	6,430	110,898	22,971	141,909
축산물류	616	548	3,130	25,920	2,358	32,571
수산물류	45	53	413	9,869	1,605	11,984
기타가공식품	54	82	823	11,938	1,491	14,387
식품전체	1,477	1,532	10,795	158,625	28,424	200,852

출처: 식약처, 2016년 카드뮴위해평가(2016.12).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 1) 위 수치는 순 섭취량 기준으로 폐기물 및 단계별 감모량이 감안된 실제 소비량과는 차이는 있음

2) 기타가공식품은 농수산물로 재분류(과자류, 빵및떡류, 면류, 두부류및묵류, 김치류, 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가공품 합계. 단, 주류 및 음료(차류, 커피, 음료류) 제외

3) 관악구 연령별 식품섭취량 추산은 연령별 평균 섭취량*연령별 인구*365일로 산출.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표 4-19> 참고 - 연령별 평균 섭취량(g/일)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일반인	고령인
	≤3세	4~6세	7~18세	19~64세	≥65세
농산물류	369.7	476.8	631.9	840.8	747.3
축산물류	298.9	307.5	307.6	196.5	76.7
수산물류	21.8	29.7	40.6	74.8	52.2
기타가공식품	26.1	46.0	80.8	90.5	48.5
식품전체	716.6	860.1	1,060.9	1,202.7	924.7

나. 공공영역 먹거리 수요 기반

□ 관내 학교급식 대상은 87개교, 32천명 수준임

- 2021년 기준 관악구에는 유치원 32개소,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 87개교가 운영 중이며, 32,043명의 학생이 있음

<표 4-20> 관악구 초·중·고등학교 현황(2021년)

구분	학교수(개소)	학급수(개)	학생수(명)
유치원	32	167	2,682
초등학교	22	674	13,550
중학교	16	298	6,966
고등학교	17	392	8,845
합계	87	1,531	32,043

출처: 관악구 통계연보

주: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포함

□ 미래세대와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등 공공급식 대상 검토

- 관악구 내에 어린이집 203개소, 지역아동센터 40개소, 복지시설 159개소 등이 운영 중이며 정원은 14천명 수준임.
- 이 밖에도 공공기관 등을 공공급식 대상 영역에 포함할 수 있음.

<표 4-21> 관악구 공공급식 수요기관 현황

구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합계
개소수	203	40	159	402
인원(명)	7,007	1,558	5,322	13,887

출처: 서울시열린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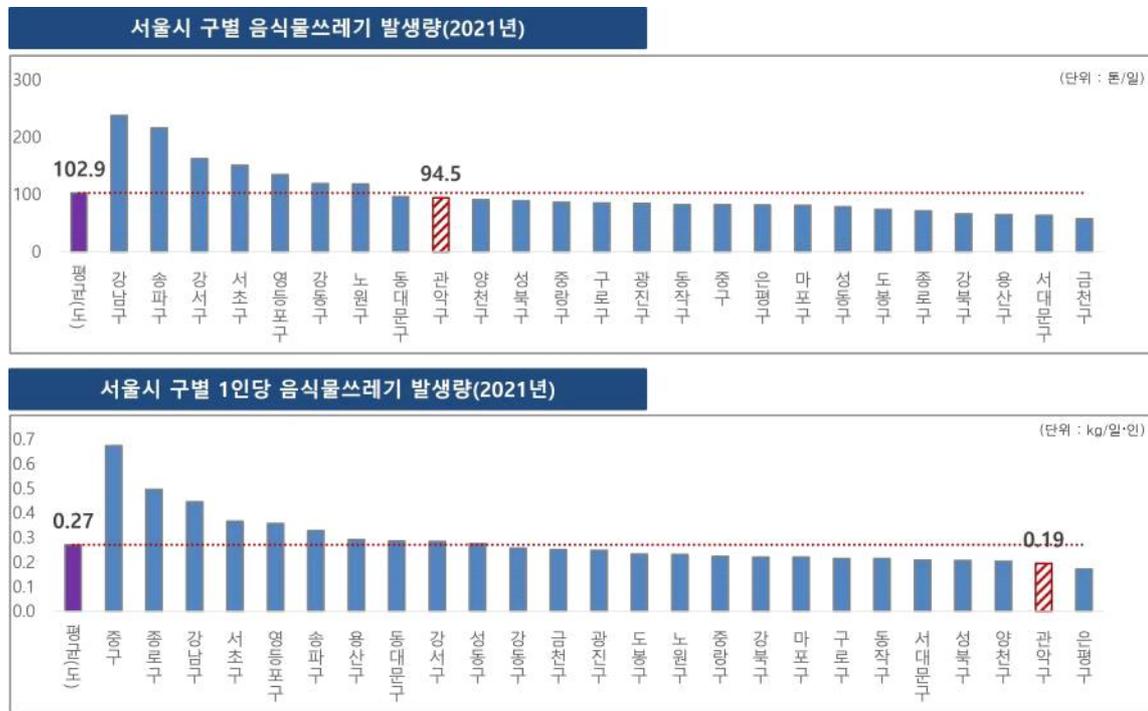
주: 1.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역아동복지센터 포함, 인원은 정원 기준임

2. 복지시설은 노인, 여성, 다문화가족,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일반 복지시설의 정원 기준임

다. 먹거리 폐기 및 재활용 현황

-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9위, 1인당 발생량은 24위 임
 - 2021년 기준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94.5톤/일로 서울시 평균 102.9톤/일보다 적으며 순위로는 9위에 해당함. 가정에서 98.9%, 사업장에서 1.1%가 발생
 - 2021년 기준 관악구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0.19kg/일·인으로 서울시 평균 0.27kg/일·인보다 낮으며 순위로는 24위에 해당함

[그림 4-16]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출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1)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대부분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관악구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34,479톤 중에 재활용이 33,476톤으로 97.1%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소각과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중에 위탁처리가 67.1%로 가장 많고, 32.7%가 공공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표 4-22>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분	발생량(톤/년)			인구기준(kg/일·인)		세대기준(kg/일·세대)		처리방식(톤,%)			
	가정	사업장	합계	인구	발생량	세대	발생량	재활용	소각	매립등	재활용율
2014	36,646	6,826	43,472	513,186	0.232	248,180	0.480	43,472	0	0	100.0%
2015	44,640	1,387	46,027	509,663	0.247	249,191	0.506	43,326	621	2,081	94.1%
2016	44,932	876	45,808	506,851	0.248	251,955	0.498	42,669	1,643	1,497	93.1%
2017	43,180	511	43,691	503,297	0.238	255,352	0.469	40,515	1,643	1,533	92.7%
2018	42,523	402	42,924	501,957	0.234	262,222	0.448	40,260	876	1,789	93.8%
2019	35,880	292	36,172	500,094	0.198	268,559	0.369	33,325	913	1,935	92.1%
2020	37,690	537	38,227	495,060	0.212	274,811	0.381	34,454	946	2,827	90.1%
2021	34,094	385	34,479	485,699	0.194	276,597	0.342	33,476	580	424	97.1%

서울시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2021년)										
구분	1인당 발생량	장소별 발생률		처리방식별 비중			재활용률			
		가정	사업장	공공처리	저가처리	위탁처리	(전체)	공공처리	저가처리	위탁처리
서울특별시	0.541	91.7%	8.3%	26.2%	0.7%	73.1%	95.5%	85.2%	93.5%	99.2%
관악구	0.194	98.9%	1.1%	32.7%	0.2%	67.1%	97.1%	91.1%	100.0%	100.0%

출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1)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연간 53억원 내외를 지출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관악구의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인건비, 차량운영비,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453억원이 소요되고 있음
- 2021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민간위탁금 등을 포함하여 53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표 4-23> 관악구 연도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

구분	예산(백만원)				집행내역(백만원)								예산대비 집행률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시설 설치비	인건비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비	위탁 처리비	시설 관리 운영비	기타	합계	
2015	0	20,722	759	21,480	0	10,451	1,644	19	7,218	721	2,135	22,189	103.3%
2016	0	30,060	4,691	34,752	0	0	0	0	8,480	0	0	8,480	24.4%
2017	0	34,774	8,752	43,526	0	12,378	646	18	13,557	2,006	5,138	33,742	77.5%
2018	0	34,374	10,475	44,849	0	14,578	1,619	24	10,138	1,015	12,701	40,075	89.4%
2019	0	42,847	10,979	53,826	0	13,820	1,482	364	17,240	511	13,489	46,906	87.1%
2020	0	49,360	11,560	60,920	0	14,932	705	11	9,907	41	19,877	45,472	74.6%
2021	0	49,110	12,685	61,795	0	14,784	679	198	29,596	42	0	45,299	73.3%

출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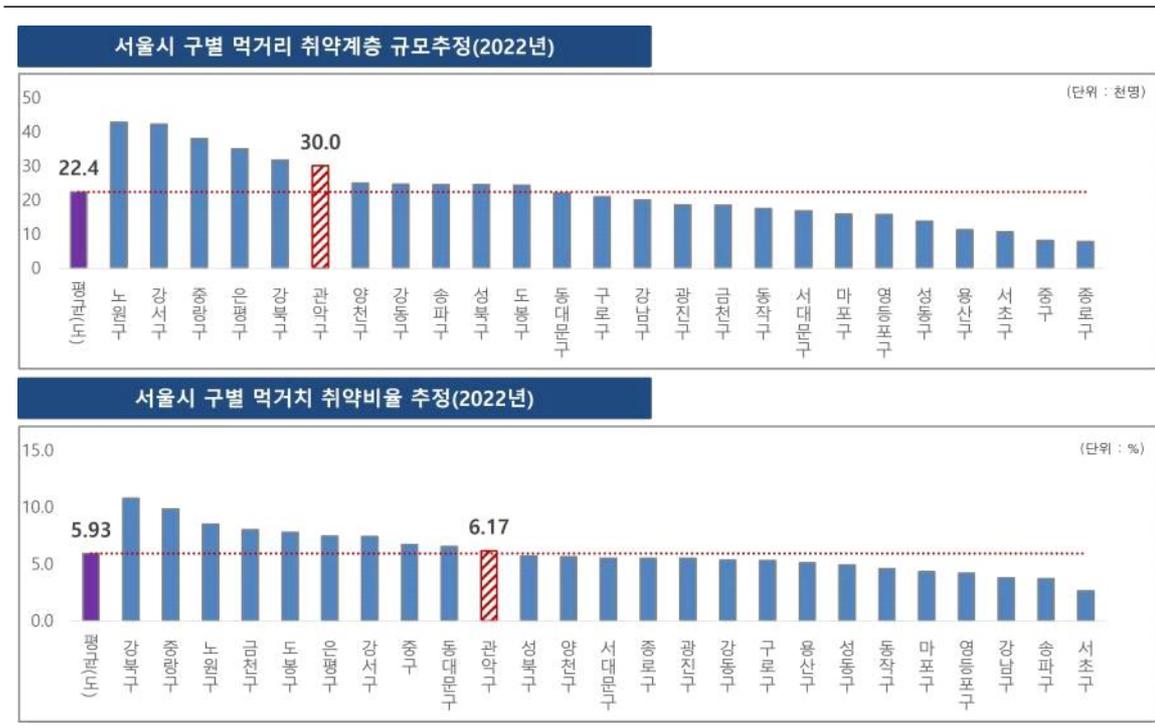
5. 관악구 먹거리 안정성 및 복지 현황

가. 시민 먹거리 보장

□ 관악구의 먹거리 취약계층은 3만명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6위로 많고, 인구 대비 비중은 10위를 차지함

- 2022년 기준 관악구의 먹거리 취약계층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보다 많은 3만명으로 추정되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6위로 높음
- 2022년 기준 관악구의 전체 인구 대비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은 6.17%로 서울시 평균 보다 높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10위를 차지함
- 먹거리 복지의 관점에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4-17] 서울시 구별 먹거리 취약계층 규모 및 비율 추정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기초생활보장 수급통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현황 등

주: 1) 취약계층 규모 추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수(중복 제외)

2) 취약계층의 서울시 평균은 25개 자치구의 단순평균. 취약비율 평균은 취약계층 인원수 단순평균/인구수 단순평균

□ 과거 10년 동안 관악구의 먹거리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먹거리 취약계층은 2013년 17.6천명 수준에서 2022년 30천명 수준으로 70.5% 증가하였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3년 10.7천명에서 2022년 23.3천명으로 118.5%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차상위계층은 같은 기간 △3.3% 감소함.
-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도 2013년 3.4% 수준에서 2022년 6.2%로 2.8포인트 증가하였음. 2013년은 서울시 평균 보다 0.2포인트 낮았지만 2022년에는 0.3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18] 관악구 연도별 먹거리 취약계층 변화추이



구분	2013(A)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B)	증감(B-A)/A
인구수(C)	518.0	513.2	509.7	506.9	503.3	502.0	500.1	495.1	485.7	486.8	-6.0%
먹거리 취약계층(D)	17.6	18.5	19.5	20.0	20.5	21.4	22.9	27.5	29.9	30.0	70.5%
- 기초생활보장	10.7	10.8	12.2	13.0	13.2	14.5	16.2	20.5	22.9	23.3	118.5%
- 차상위계층	6.9	7.7	7.2	6.9	7.3	7.0	6.6	7.0	7.0	6.7	-3.3%
취약비율 (D/C)	3.4%	3.6%	3.8%	3.9%	4.1%	4.3%	4.6%	5.6%	6.2%	6.2%	2.8%p
(서울 취약비율)	3.6%	3.8%	4.2%	4.3%	4.3%	4.6%	4.8%	5.4%	5.8%	5.9%	2.3%p

출처: 관악구, 통계청

□ 관악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현재 23,318명이며, 노원구 (32,453명), 강서구(31,728명), 중랑구(28,019명), 은평구(25,922명) 다음으로 많음

- 이 중 일반수급자는 18,276명, 조건부 수급자는 4,126명, 특례 수급자 544명, 시설 수급자 372명임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난곡동으로 관내 수급자의 9.5%인 2,22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어서 온천동(1,651명), 성현동(1,616명), 삼성동(1,550명), 대학동(1,466명)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관악구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이 시행 중인 지역임(박정수, 2021)

<표 4-24> 관악구 행정동별 기초수급자 현황

관악구	2022				
	총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소 계	23,318	18,276	4,126	544	372
보라매동	1,141	925	198	18	-
청림동	606	519	70	17	-
행운동	1,077	914	142	21	-
낙성대동	454	341	100	13	-
중앙동	608	497	96	15	-
인현동	747	628	104	15	-
남현동	365	285	72	8	-
서원동	939	729	186	24	-
신원동	1,132	906	187	39	-
서림동	1,299	950	328	21	-
신사동	1,203	952	239	12	-
신림동	891	680	201	10	-
난향동	661	548	85	28	-
조원동	745	644	94	7	-
대학동	1,466	1,090	347	29	-
은천동	1,651	1,387	221	43	-
성현동	1,616	1,283	268	65	-
청룡동	1,118	917	166	35	-
난곡동	2,225	1,726	436	63	-
삼성동	1,550	1,313	207	30	-
미성동	1,417	1,008	378	31	-
기타	407	34	1	-	372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식품 안정성 확보 미흡 및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을 살펴보면, 식품 미보장 가구 비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가구 또한 0.2%에 달함
 - 서울시 평균 미보장률 10.6% 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서울특별시, 2022년 먹거리 통계조사 보고서)
- 특히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식품 안정성 확보율은 31.7%로 급격히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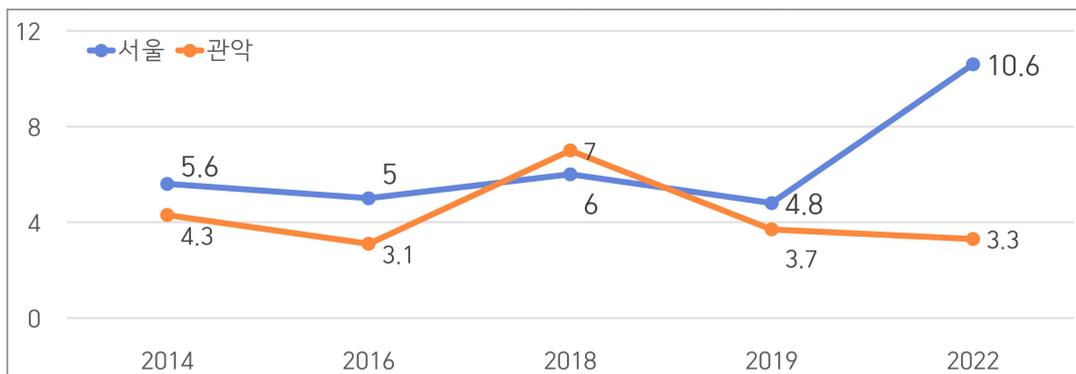
<표 4-25> 관악구 식품 안정성 가구 비중

구 분	사례수 (N)	음식섭취 (A : 충분한 양, B : 다 양한 종류의 음식)		가끔 먹을 것이 부족 (A)	자주 먹을 것이 부족 (B)	식품 안전성 미확보율 (A+B)/N	
		A:QB:○	A:QB:×				
전 체	916	746	140	28	2	3.3%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1	11	17	13	0	31.7%
	100~200만원 미만	166	110	43	11	2	7.8%
	200~300만원 미만	156	132	24	0	0	0.0%
	300~400만원 미만	45	43	1	1	0	2.2%
	400만원 이상	360	316	44	0	0	0.0%
	응답 거부	148	134	11	3	0	2.0%

출처 : 관악구(2022),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시자료를 참고로 제작성(보건소)

- 관악구의 먹거리 정책의 주된 대상은 음식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질적 부족층 15.3%와 음식을 가끔 또는 자주 충분히 먹지 못하는 양적질적 부족층 3.3%를 합한 18.6%임
- 관악구의 식품 안전성 미확보(미보장) 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서울시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관악구의 식품 안전성 미확보 가구는 2014년 4.3%에서 2022년 3.3%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전체의 식품 안전성 미확보 가구는 같은 기간 5.6%에서 10.6%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그림 4-19] 서울시 및 관악구 식품 안전성 미확보율 추이



출처 : 관악구(2022), 지역사회건강통계 및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나. 시민의 먹거리 건강 현황

□ 관악구의 아침식사 결식율은 52.8%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

- 2022년 기준 관악구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2.8%로 서울시 평균 46.8%보다 높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임. 연령별로 나이가 적을 수록 결식률이 높게 나타남

<표 4-26> 서울시 자치구별 아침식사 결식률(2022년)

구분	조율	순위	표준화율	순위	구분	조율	순위	표준화율	순위
관악구	52.8	1	55.7	7	송파구	46.8	14	53.0	17
성동구	51.8	2	59.6	2	영등포구	46.6	15	52.5	19
마포구	51.6	3	56.6	5	동작구	46.4	16	52.3	21
서대문구	51.2	4	58.0	3	서초구	46.3	17	52.6	18
강남구	50.8	5	56.4	6	구로구	45.8	18	54.8	11
강북구	48.1	6	59.9	1	노원구	45.3	19	53.3	14
광진구	48.0	7	53.2	15	강동구	44.1	20	51.7	23
용산구	47.9	8	55.2	9	중구	43.9	21	51.9	22
금천구	47.8	9	55.4	8	은평구	43.7	22	53.1	16
강서구	47.2	10	53.5	13	양천구	42.5	23	51.2	24
성북구	47.0	11	55.0	10	도봉구	41.0	24	52.4	20
종로구	46.9	12	54.4	12	동대문구	39.9	25	47.2	25
중랑구	46.8	13	56.7	4	평 균	46.8		54.2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아침결식 예방인구비율

주: 1) 결식 비율 = (주4일 이하 아침식사한 응답자수/조사대상 응답자수)*100

2) 예방 비율 = (주5일 이상 아침식사한 응답자수/조사대상 응답자수)*100

3) 조율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고, 표준화율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를 표준인구(2005)로 보정한 결과치임.

<표 4-27> 관악구 아침식사 결식률 현황

관악구 아침식사 빈도(2022년)					
구분	아침 결식인구 비율			결식 비율	예방 비율
	0일	1~2일	3~4일	0~4일	5~7일
전체	36.7	7.0	9.2	52.8	47.2
남자	37.8	7.4	11.9	57.1	42.9
여자	35.6	6.6	6.4	48.5	51.5

관악구 연령대별 아침식사 빈도(2022년)					
구분	아침 결식인구 비율			결식 비율	예방 비율
	0일	1~2일	3~4일	0~4일	5~7일
19-29세	56.0	11.2	13.2	80.5	19.5
30-39세	48.0	11.5	11.9	71.3	28.7
40-49세	39.1	3.6	7.8	50.5	49.5
50-59세	31.8	5.0	10.3	47.1	52.9
60-69세	13.3	4.4	2.8	20.5	79.5
70세 이상	7.6	0.7	3.5	11.8	88.2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아침결식 예방인구비율

□ 관악구의 비만율은 31.0%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7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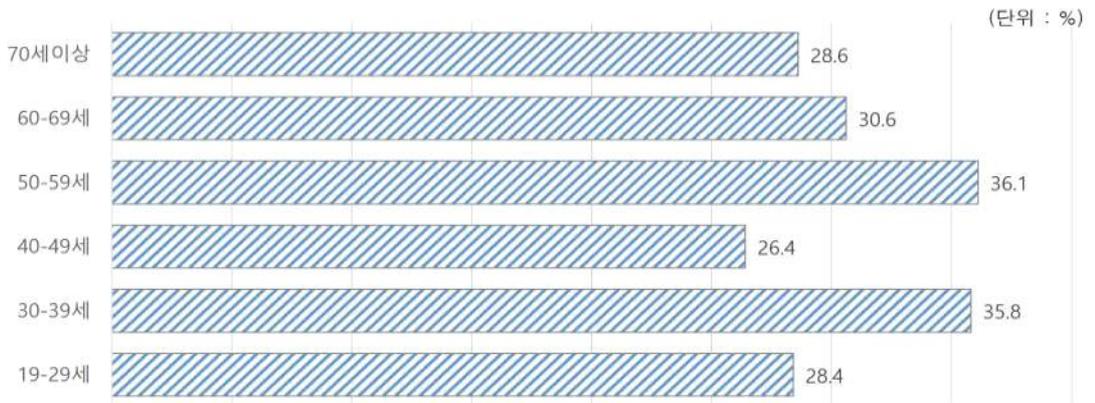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관악구의 비만율(자가보고)은 31.0%로 서울시 평균 29.5%보다 높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7위임.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타남.

<표 4-28> 서울시 구별 비만율(자가보고, 2022년)

구분	조율	순위	표준화율	순위	구분	조율	순위	표준화율	순위
중랑구	34.6	1	35.5	1	노원구	29.1	14	29.1	17
금천구	33.1	2	33.6	2	마포구	28.9	15	29.7	15
강북구	33	3	33.3	3	강동구	28.9	16	30	14
도봉구	32.7	4	33.1	4	영등포구	28.5	17	29.6	16
구로구	31.5	5	32.5	5	송파구	28.1	18	28.8	19
광진구	31.1	6	31.6	7	성동구	28	19	28.3	20
관악구	31.0	7	30.7	11	강서구	27.7	20	29	18
은평구	30.7	8	30.7	10	종로구	27.5	21	27.1	22
서대문구	30.2	9	30.6	12	용산구	27.2	22	28.2	21
양천구	30.1	10	30.8	9	강남구	25.9	23	26.8	24
성북구	29.8	11	31.9	6	중구	25.5	24	25.1	25
동작구	29.7	12	31	8	서초구	25.3	25	26.8	23
동대문구	29.5	13	30.5	13	평균	29.5		30.2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비만율

[그림 4-20] 관악구 연령별 성인 비만율(자가보고, 2022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특별시	조사자수	22,647	22,293	22,461	22,628	22,751	22,763
	비만율	25.7	28.8	28.5	28.2	28.6	29.5
관악구	조사자수	904	906	912	917	919	916
	비만율	25.5	26.2	26.4	26.6	29.5	31.0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비만율

□ 관악구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8.9%,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10.0% 수준임

-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8.9%로 서울시 평균 보다 소폭 높으며,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2022년 기준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10.0%로 서울시 평균 보다 소폭 낮으며,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그림 4-21] 관악구 연도별, 연령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주: 진단 경험률은 누적 개념으로 연령대가 높을 수록 진단 경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그림 4-22] 관악구 연도별, 연령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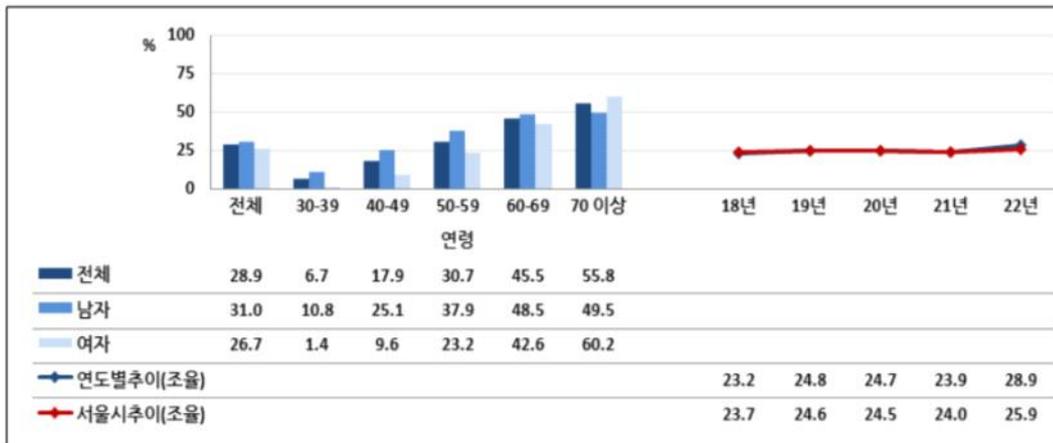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주: 진단 경험률은 누적 개념으로 연령대가 높을 수록 진단 경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 관악구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8.9%로 전년 대비 5% 증가함

- 고혈압 진단을 받은 30세 이상 비율은 28.9%로, 전년 대비 5.0%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25.9%에 비해 3.0%p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유병률을 보임
 - 20대 1.7%, 30대 6.7%, 40대 17.9%, 50대 30.7%, 60대 45.5%, 70세 이상 55.8%
- 고혈압 진단 경험을 직업과 소득별로 살펴보면, 기능단순노무직(37.9%),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41.2%)가 가장 높음
- 특히 100만원 이하(19명) 응답자는 현재 고혈압 치료나 관리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23] 관악구민의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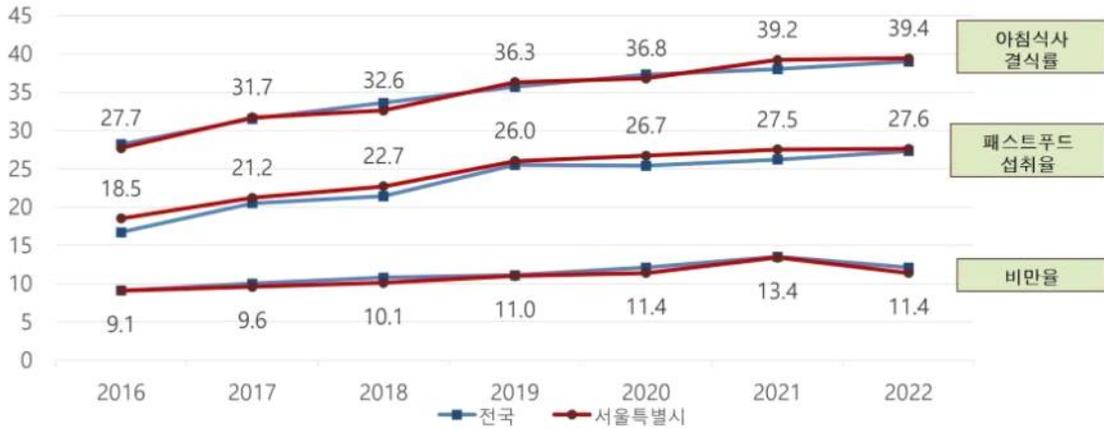


출처 : 관악구(2022). 지역사회건강통계

□ 전국 및 서울시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 패스트푸드 섭취율,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9.4%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7.6%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청소년의 비만율은 1.4%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림 4-24] 전국 및 서울시 청소년 식생활 현황(%)



구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만율	전국(A)	9.1	10.0	10.8	11.1	12.1	13.5	12.1
	서울특별시(B)	9.1	9.6	10.1	11.0	11.4	13.4	11.4
	B-A	0.0p	-0.4p	-0.7p	-0.1p	-0.7p	-0.1p	-0.7p
아침식사 결식률	전국(A)	28.2	31.5	33.6	35.7	37.3	38.0	39.0
	서울특별시(B)	27.7	31.7	32.6	36.3	36.8	39.2	39.4
	B-A	-0.5p	0.2p	-1.0p	0.6p	-0.5p	1.2p	0.4p
패스트푸드 섭취율	전국(A)	16.7	20.5	21.4	25.5	25.4	26.2	27.3
	서울특별시(B)	18.5	21.2	22.7	26.0	26.7	27.5	27.6
	B-A	1.8p	0.7p	1.3p	0.5p	1.3p	1.3p	0.3p

출처: 통계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없음

□ 관악구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59.0%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위를 기록

- 2022년 기준 관악구 주민의 건강 인지율은 59.0%로 서울시 평균 46.1%로 보다 높으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3위를 기록함(표준화율은 4위). 이는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성별로는 여성 보다 남성이 전반적으로 건강 인지율이 높고, 당연히 연령이 높아 지면서 낮아짐.
-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건강 인지율이 42.8%인 반면 400만원 이상은 63.6%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5] 서울시 자치구별 주관적 건강 인지율(2022년)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 1) 주관적 건강인지율 : (본인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 좋음’ 응답자수/조사대상 응답자수)*100

2) 조율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고, 표준화율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를 표준인구(2005)로 보정한 결과치임.

[그림 4-26] 관악구 연령별, 소득별 주관적 건강인지율(2022년)



관악구 소득별 주관적 건강인지율(2022년)

구분	응답자수	전체 (%)	남자 (%)	여자 (%)
100만원 미만	42	42.8	55.7	27.0
100-200만원 미만	89	40.3	52.0	29.4
200-300만원 미만	172	55.6	60.5	51.3
300-400만원 미만	160	61.2	71.8	51.2
400만원 이상	453	63.6	69.9	56.8

출처: 통계청, 시군구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다. 서울 서남권 먹거리 행태 분석¹⁴⁾

□ 먹거리 미보장 가구

- 관악구를 포함한 서남권 지역의 먹거리 미보장 비율은 17.8%로 서울 권역별 중 가장 높음(서울 평균 10.6%)
- 서울시 전체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먹거리 보장 수준이 취약한 집단은 70대 이상(52.6%), 1인 가구(21.9%), 200만원 이하의 집단(29.2%)로 조사됨

□ 지역사회 식품 환경

- 동네 식료품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86.7%(서울 평균 82.8%),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71.6%(서울 평균 71.1%)로 나타남
- 동네 식료품점의 가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73.5%(서울 평균 70.9%),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84.7%(서울 평균 75.9%)로 나타남
- 동네 식료품점의 신선도와 질이 좋다는 응답은 74.0%(서울 평균 74.7%)임

□ 식사 행태

- 일주일간 평균 식사 횟수는 17.0회이며, 이 중 아침식사는 4.2회 점심식사 6.5회, 저녁식사 6.4회임
- 집에서 본인 또는 타인이 조리한 식사를 한 경우는 9.9회(본인 5.3회, 타인 4.6회)이고, 배달 또는 포장 음식을 이용한 식사는 1.6회, 편의점 식사는 0.5회, 음식점 식사는 3.9회, 단체급식은 1.1회임
- 혼자 식사를 한 빈도는 4.7회(집안 3.9회, 집 밖 0.8회)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70.1%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권역보다 일이 바빠거나 시간이 없어서(58.5%)라는 이유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14) 서울특별시(2022),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작성했으며, 서남권은 관악구를 포함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7개 자치구로 구성됨

-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응답자는 8.4%로 서울 평균 5.8%보다 2.6%p 높게 나타남.
 -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vegan)이 0.3%, ‘붉은 고기만 먹지 않는’ 폴로 베지테리안(pollo-vegetarian)이 0.3%, ‘기본적으로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이 7.8%로 채식주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집 밖에서 채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은 그렇다는 의견이 64.0%로 서울 평균 60.7%보다 높게 나타남(10점 만점에 5.8점)

□ 식습관 유형

- 저칼로리 저염식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비율이 51.5%이고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7.75점임(서울시 평균 7.48점)
-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노력 비율은 47.0%이고 평균 점수는 7.48점임(서울시 평균과 같음)
- 식사를 빠른 시간에 하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은 41.4%이고 평균 점수는 7.07점임(서울시 평균 7.18점)
- 편의식품 선호 비율은 권역별 중 가장 높은 41.5%로 평균 점수는 7.13점임(서울시 평균 6.33점)

6. 관악구 먹거리 정책 현황

가. 민선8기 비전과 정책 방향

□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 조성을 위해 6대 실천과제 추진

- 민선8기 관악구는 ‘혁신, 포용, 협치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의 비전과 경제, 복지, 청년특별시, 교육문화, 청정 안전샾터 등 6대 목표를 수립하고 6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6대 실천과제 중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행복한 1인가구, 도시농업 등 먹거리 관련 정책의 연계 추진 방안 마련 필요

[그림 4-27] 관악구 민선8기 비전과 6대 목표



출처: 관악구청

<표 4-29> 관악구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먹거리 연계가능 사업

분야별	사업명	먹거리 연계성
더불어 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상
	전통시장 활성화	중
더불어 복지	행복한 1인 가구	상
	관악장애인센터 건립	중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중
청정 안전샾터	도시농업 활성화	상
	탄소중립 도시 조성	중
	관악동작 자원순환센터 건립	중

출처: 관악구청

나. 먹거리 관련 조례 현황

□ 관악구는 현재 먹거리 관련 친환경급식, 아동급식,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가 있음

- 관악구의 먹거리 관련 조례는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22.10)’,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22.12)’, ‘관악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2013.12)’,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7) 등이 있음.

□ 현재 먹거리 보장 및 계획수립에 대한 조례는 없음.

<표 4-30>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3조,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성장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및 자치단체협약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구청장 및 청년문화국장 2. 관악구의회 의원 3. 교육청 관련부서장 4. 초,중,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급식전문가 9.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신설 2015.12.28.>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 관련 해당 부서 장으로 한다.</p> <p>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p> <p>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⑦ 기타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7. 기타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관악구 소속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 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 4-31>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증대하고 녹색도시공간을 확보하며 구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관련 4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1명
2. 도시농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구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참여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학습·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
5. 상자텃밭·옥상텃밭의 보급사업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
7.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콘테스트 등 행사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다. 먹거리 관련 주요 지원 정책

□ 관악구는 친환경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도시농업 등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예산서 기준 친환경 급식지원 5,261백만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1,177백만원, 아동급식 지원 1,958백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690백만원 등 총 105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4-32> 2023년 먹거리 및 도시농업 관련 주요 예산

담당과	사업명	예산(2023년)
교육지원과	친환경 급식 지원	5,261,000천원
	- 유치원 급식지원	523,000천원
	- 학교급식 지원	4,738,000천원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16,277천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1,176,566천원
	아동급식 지원	1,958,400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급식지원	64,462천원
생활복지과	정부양곡 지원	281,400천원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식생활지원 공유주방 '인헌애 부엌'	15,000천원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시도비)	75,036천원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150,072천원
보건지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157,200천원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30,000천원
공원녹지과	도시농업 활성화	690,414천원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9,430천원
	- 도시텃밭 운영	441,111천원
	- 상자텃밭 보급	43,000천원
	- 도시양봉 육성	68,253천원
	- 자투리 텃밭 조성 및 유지 관리	118,620천원
	도시농업공원 시설개선	60,000천원
	청룡산주민텃밭공원 산책로계단 정비	20,000천원
계		10,555,827천원

출처: 관악구 2023년 예산서

7. 표적집단면접(FGI) 조사결과

가. 조사 개요

□ 관악구 먹거리에 관한 정책 및 먹거리자원, 먹거리관련 사업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조사

- 면접은 2그룹(1그룹 6명, 2그룹 5명)으로 나누어 동일한 질문(6개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함
- 면접의 질문내용
 - 관악구민은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 관악구를 대표하는 먹거리정책은?
 - 관악구에서 가장 필요한 먹거리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관악구 먹거리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소개한다면?
 - 먹거리관련 정책, 제도 등의 영역에서 본인이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먹거리 분야 자원이 있다면?
 - 생애주기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은?

나. 면접대상 특징

□ 면접대상자 모집

- 관악구에서 마을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구글폼의 활용한 양식을 링크형태로 배포하여 면접대상자 모집
- 11월 8일~11월 15일 링크를 통해 접수한 15명이 면접참여 답변을 제출하였음. 면접은 관악구의회 4층 자료실에서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6명)와 오후 4시(5명) 2그룹 나누어 진행하였음. 참여의사 제출자는 15명이었으나, 최종 면접참여자는 11명이었음
- 면접참여자 모집 양식은 다음과 같음

관악구의회 먹거리 연구회
.먹거리정책 주민의견 표적집단
면접 참여자 모집

관악구의회 먹거리 연구회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표적집단 면접조사 를 실시합니다.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tonari0070@gmail.com [계정 전환](#)

비공개

성명

내 답변

성별

남성

여성

나이

내 답변

연락처

내 답변

지역 활동 경력

내 답변

참여가능시간

16일 오후2시

16일 오후4시

이메일 주소(있는 분만 적어주세요)

내 답변

양식 지우기

□ 제 1그룹(6명) 면접자 구성

- 면접참가자는 전원 관악구에서 생협, 마을공동체 활동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저소득층 지원 도시락 만들기 및 배달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구민이 지원

□ 제 2그룹(5명) 면접자 구성

- 면접참가자는 사회적 기업 운영자, 마을자치센터장,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경험이 있는 구민이 지원

다. 조사결과

□ 관악구민의 먹거리 보장상태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구민의 상황이 같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영양적인 부분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먹거리보장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양적인 부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양적인 공급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상태이지만,

관악구는 대형마트가 전무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있어서는 불균형적이라는 인식이 강함.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비교했을 때 먹거리 안정성부분에 있어서는 대형마트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남

□ 관악구를 대표하는 먹거리 정책

- 재래시장 활성화를 대표적인 먹거리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책이 아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벤트, 축제 등)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재래시장활성화가 먹거리정책으로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푸드플랜과 연결하여 푸드뱅크 등의 도입·운영 등이 필요할 것임

□ 관악구에서 필요한 먹거리 정책

- 관악구는 25개구 중 1인세대 비율이 가장 높음 구임. 따라서 1인 세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 많은 공약이 집중되어 있으나, 현재 먹거리정책의 경우 타겟이 분명하지 않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1인세대라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니즈가 다르므로 좀더 정책을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니즈에 부합한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먹거리의 양과 질에 대한 통합적 푸드플랜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예를 들면 친환경급식센터와 같은 시설을 거점시설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임
- 현재 먹거리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구민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로부터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 중 하나로 주민센터에 의존한 지원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

□ 관악구 먹거리 관련 인적·물적 자원

- 낙성대 강감찬공원 텃밭과 같은 농장형 텃밭은 매우 좋은 자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배분되는지 배분의 공정성, 투명성 등이 모호함. 동네별로 낙성대 텃밭과 같은 텃밭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취약계층의 먹거리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텃밭의 확보가 어렵다면 구로구의 해피팜과 같은 스파트팜의 도입으로 도시농업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시농업의 생산불균형(노지농업의 경우, 여름생산량은 많으나, 겨울은 생산자체가 어려움)문제도 해소할 수 있음

□ 관악구 먹거리정책 및 제도 등에 본인 참여 의사

- 관악구에는 먹거리정책관련 다양한 활동참여 기회가 있어 면접 대상자들의 경우는 과거 참여경험이 있거나, 현재에 참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계층 도시락 공급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외에도 푸드뱅크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기부 등이 가능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마련·확대되기를 희망함

□ 생애주기별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 관악구에서 운영되던 어린이식당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운영이 중지되었음. 일하는 워킹맘들에게 어린이식당은 큰 도움이 되므로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어린이식당의 확대 보급이 필요할 것임
- 노원·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식당(공동체 식당)도 도입이 필요한 시설로 제안함
- 주민센터 등에서 바우처나 현물지원을 할 때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장치가 필요함. 아무런 장치 없이 나누어주는 것만으로는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음. 지원사업이나 대상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청소년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교육 및 실생활 네트워크 등을 할 수 있는 먹거리 교육정책이 시급함

□ 관악구의 먹거리정책관련 문제점

- 25개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해 붙을 쓸 수 없는 주거구조를 가진 주거형태가 계속 증가함. 이에 따라 라이더 활동율도 서울시 25개구 중 1위임. 결국 관악구의 먹거리 문제는 1인 가구라도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종합적인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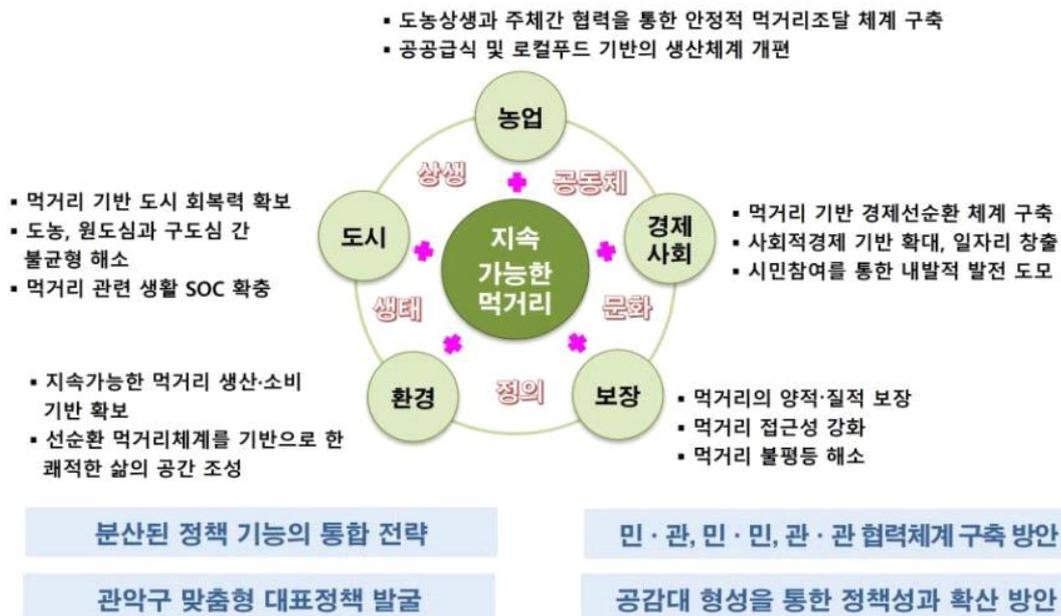
V. 관악구 먹거리 정책 제안

1. 관악구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의 필요성

가. 관악구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 기본권으로서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외 국가와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 도 2022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1개 지자체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평구 등은 이미 수립하였음
- 먹거리 관련 지역의 자원과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반의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과 소비 도시로서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그림 4-28]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방향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도시-경제사회-환경-보장 등 통합적 관점에서 분산된 정책의 통합 전략, 민·관, 민·민, 관·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관악구의 대표적인 먹거리 정책 발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간과 시민사회 활동 및 교육을 연계하는 추진전략 수립 필요
- 향후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겠지만 관악구의 특성을 감안 할 때 먹거리 전략의 핵심과제는 ① 도시민에 대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②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통합돌봄 체계 구축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먹거리 순환기반 조성 등이 목표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푸드플랜 기반구축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 관련 주체의 발굴과 육성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조달체계 강화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급식과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 조달체계 운영(중간지원조직 확대 운영) △지역먹거리 소비·체험 확대 △지역간 먹거리 공동 협의체 운영 등 추진

[그림 4-29] 관악구 먹거리 전략 핵심과제와 분야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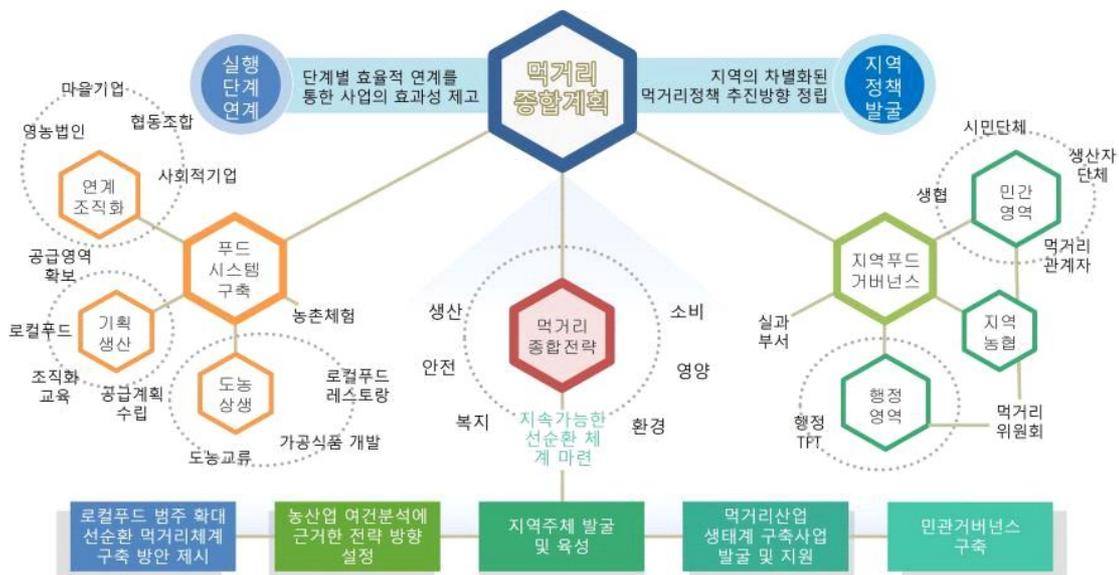
관악구 먹거리 전략 단계별 목표과제 구성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	
먹거리 전략 핵심과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먹거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먹거리 순환기반 조성			
	먹거리 소비 공공성 강화, 안전 먹거리 소비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식생활교육 활성화			
	푸드플랜 기반 구축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공동체회복)	먹거리 정의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
분야별 핵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관련주체발굴 ✓공공급식조달체계구축 ✓도시농업, 공공급식확대지원 ✓공감대형성및거버넌스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급식조달체계운영 ✓지역먹거리소비체험확대 ✓인접지자체먹거리조달연계 ✓먹거리공동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먹거리소비공동체확대 ✓도시농업과사회적농업활성화 ✓로컬유통기공주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먹거리지원확대 ✓시민영양개선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먹거리통합돌봄 ✓먹거리보장지표관리

-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관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지원 △먹거리 지역 공동체 확대(마을부엌, 어린이식당, 도시락 나눔 등) △도시농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로컬푸드 유통/가공 주체 육성 등 추진
- 먹거리 정의와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 △시민 영양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먹거리 통합돌봄 정책 확대 △먹거리 보장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

나. 관악구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은 형식적인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 영역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전제로 함
- 먹거리 종합계획은 행정과 민간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① 먹거리 실태조사 ② 지역 먹거리 정책 발굴 ③ 단계별 실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④ 5년 내외의 주기적인 평가와 차기 계획수립을 통해 민·관의 공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대상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그림 4-30]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방향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서대문구의 경우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먹거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먹거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를 운영
-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는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행정(국장 및 보건소장, 5명), 구의원(2명), 주민공모를 통해 위촉된 민간위원(33명이내) 등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먹거리 정책의 총괄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
-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 실행은 ‘실무조정위원회(먹거리 전담부서와 관련 기관단체 참여)’를 통해 지원하는 역할분담 체계로 운영
- 관악구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①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 ② 먹거리위원회 ③ 분과위원회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1]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조직체계



출처: 서대문구

<표 4-33>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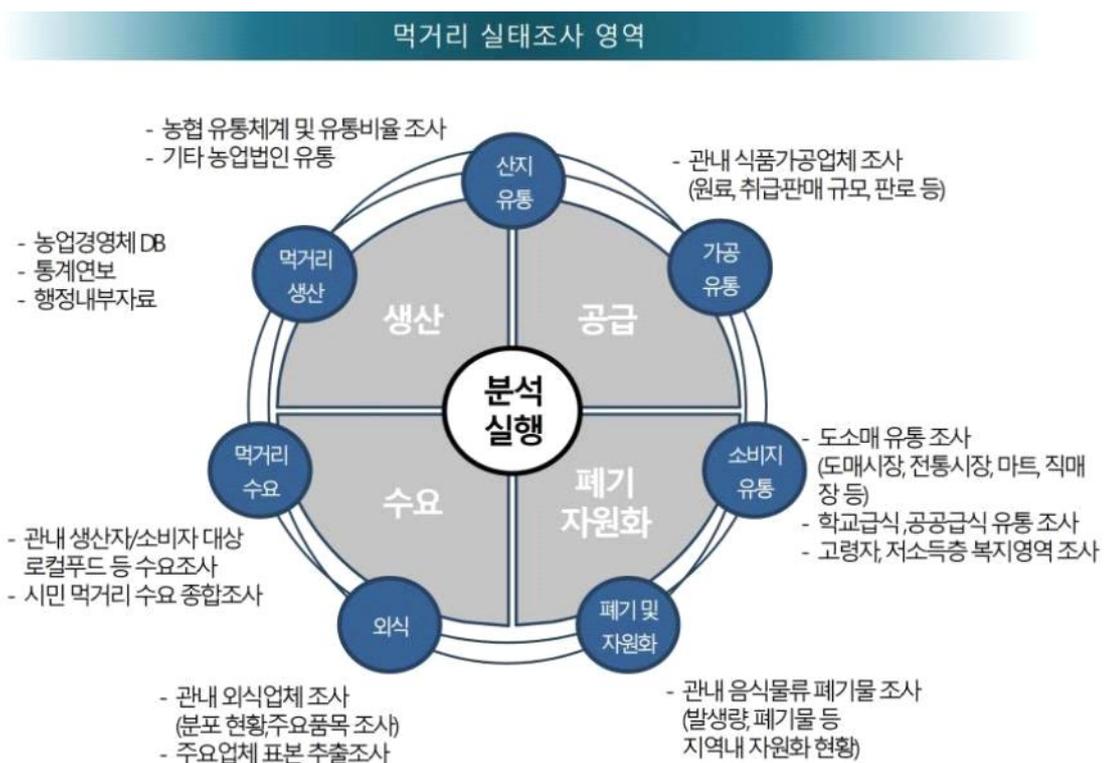
구분	구성	역할
먹거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5명) : 구청장(위원장), 국장 및 보건소장 등 • 위촉직 구의원(2명) • 주민공모 위촉직(33명 이내) :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먹거리 관련 기관·단체 추천, 관련 전문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정책 심의·자문 등 • 반기별 1회 이상 회의
분과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위원 중 구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 • 분과별 분과장 및 총무는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개 이상 분과 설치
실무조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당연직 • 먹거리전담부서 팀장 및 주무관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 각 분과별 분과장 및 총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기능과 협치에 기반한 먹거리 정책추진 • 연6회 이상 회의

출처: 서대문구

2. 관악구 먹거리 실태조사 추진

- 본 연구에서는 문서자료와 통계자료, FGI 조사를 중심으로 관악구 먹거리 환경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먹거리 분야별, 시민 영역별로 보다 깊이 있는 실태조사 와 먹거리 수요조사를 통해 먹거리 정책 발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 국내외 먹거리 우수사례, 관악구의 부서 별 먹거리 정책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템과 개선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관악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먹거리 실태조사는 ①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저소득층, 1인가구, 독거노인, 결식아동, 청년 등) ② 공공기관 급식운영 실태 ③ 시민의 먹 거리 정책 수요조사(도시농업, 식교육 등)를 집중하여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취약 계층 먹거리 보장정책, 공공급식 확대 등 정책 실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2]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주요 영역



출처: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3.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강화

- 관악구의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은 약3만명(25개 자치구 중 6위)으로 추정되고,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1위를 차지함. 하지만, 1인 가구의 먹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발굴 등은 취약한 편임
- 적은 양을 과도한 포장없이 건강한 먹거리(채소, 과일 등)를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의 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정보원이 전 국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과 같은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악구에서 가능한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관악구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인층(저소득노인 무료급식, 경로당 양곡 지원), 아동(아동급식 지원), 청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급식 지원), 취약계층(공유 주방, 푸드뱅크마켓), 임산부(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등 지원하고 있음
- FGI 조사에서도 △먹거리 보장 대상 설정 △통합돌봄과 먹거리보장의 연계 △도시 농업(텃밭)과 취약계층 연계 △취약계층 도시락 공급 △어린이 식당 운영 재개 △ 청소년 등 공동체 식당 운영 △먹거리 교육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여 사업으로 연결
- 먹거리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① 먹거리 사각지대 발굴과 대상 계층별 정책 발굴 ② 통합돌봄과 먹거리보장 연계 ③ 관악구 대표 시범사업(어린이, 공동체 등) 추진 ④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표 4-34> 취약계층의 개념

취약계층의 구분		개념
경제적 취약계층	빈곤층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한의 필수품을 조달하기에 불충분한 집단
사회적 취약계층	생애 위험	노년, 아동, 출산여성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집단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민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여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집단
	질병/사고	질병, 산업재해, 실업/실직 등으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집단
	사회적 배려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안정방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집단(사각지대)

출처: 서울시(2018)

<표 4-35> 먹거리 보장의 유형과 내용

구분	의미	내용	보장수준	
접근성	누가 먹거리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성 : 공평한 접근 ○ 안전성 : 지속가능한 접근 ○ 존엄성 : 수용가능한 접근 	개인·가구 단위	지역 사회 단위
적절성	어떤 수준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성 : 양과 질의 적절성 ○ 안전성 : 안전한 먹거리 ○ 선택가능성 : 개인의 기호반영 		
지속가능성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 지속가능한 생산 ○ 지역사회지지 : 동의와 협조 ○ 먹거리전달체계 구축 		

출처: 서울시(2018)

4. 도시농업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

- 관악구는 도시농업(도시텃밭, 학교텃밭, 도시농업공원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악도시농업축제 등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4-33] 관악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p>관악구 도시농업 학교</p>		
<p>관악구 싱싱텃밭 생활원에 치유 프로그램</p>		
<p>탈북 다문화 청소년 도시텃밭 프로그램</p>		

출처: 관악구, 서울시도시농업포털

- 향후에는 치유농업, 돌봄농장, 식생활교육 등 영역을 확장하여 일반시민, 장애인, 고령층, 어린이와 청소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시농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존에 확보한 텃밭마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대상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먹거리 계획과 연계를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사례로 학교텃밭은 현재 서울시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구차원에서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투리텃밭의 경우, 자치구 단위로 신청하여 서울시가 조성비의 50%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자투리 텃밭을 확보한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이행 약속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텃밭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관악구는 서울시에 3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농업 복합공간(낙성대로 96)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농업의 다양한 공유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므로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거점으로 먹거리 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도시농업에서의 텃밭은 대부분이 먹거리 생산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 확보 수단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관악구 차원에서 직접 시범농장 등을 조성·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참여(일자리 창출)로 일정한 양을 생산하여 복지시설 등에 공급한다면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임

5. 도농간 협력사업 및 시민교육 확대

- 관악구는 농업기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와 협력은 어려운 구조이고, 도시 소비자와 지방 농민의 직접 교류 사업은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2018~2019년도에 관악구의 사회적경제장터인 꿈시장과 상주시, 청양군의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상생 먹거리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이 시범운영되었지만 원활하게 지속되지 못함

-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감안하여 ① 꿈시장에 지역 농민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예, 농부시장 마르쉐) ②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과 자매결연 지역의 농산물가공품 판로확보 기회 제공(예, 서울시 상생상회) ③ 농촌 일손 부족과 도시 일자리 연계 사업 (예, 서울시 도농상생사업) ④ 농촌 체험교류 활동에 관악구민 참여기회 제공 ⑤ 시민 식생활교육에 먹거리 생산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그림 4-34] 관악구-상주청양 상생 먹거리유통시스템 구축사업 사례



출처: 관악구

참고문헌

- 경기연구원. (2019),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및 추진 방안 연구용역』, 경기도
- 김기량김미경신영진. (2008), 식품보장의 개념과 측정, 『예방의학회지』 제41권 제6호
- _____. (2009), 한국 식품 미보장 현황 및 특성,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 김성아서다람김상효김기량. (2022), 먹거리 체계 관점에서 본 먹거리 위기와 유형,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2호
- 김소연김순영. (2019), 공동체먹거리보장의 관점에서 본 마을부업의 의미와 먹거리보장 정책의 전환적 과제,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3호
- 김철규. (2008), 현대 식품체계의 동학과 먹거리 주권, 『환경사회학연구 ECO』.
- 김철규윤병선김흥주. (2012),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식량 보장과 식품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96호
- 길청순. (2019), 푸드플랜 개념 및 서대문구 연구용역 결과보고, 『2019년 푸드플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서대문구 푸드플랜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김흥주이해진. (2012). 한국의 먹거리 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
- 문은숙손창우문진영. (2016),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서울연구원.
- 박민선. (2009), 초국적 농식품체계의 먹거리 위기, 『농촌사회』 제19권 제2호
- 박정수. (2021). 관악구 공공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 _____. (2021), 서울특별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년~2025년).
- _____. (2019), 지속가능 먹거리 도시 서울 : 서울특별시 먹거리 전략 2030 수립 용역보고서.
- 송원규윤병선. (2012).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위기: 대안의 모색: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농촌사회』 제22권 제1호
- 윤병선. (2023), 먹거리제정법 제정의 의미,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 자료집』, 민형배 의원실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이수행박정지. (2019). 경기도 먹거리전략 추진방향과 과제. 이슈 & 진단, No.375. 경기연구원
- 이천시. (2020),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 조효제. (2013), 먹거리 인권과 먹거리 주권의 시론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제2호
-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2022),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최지현. (2017),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남혁. (2016), 『밀라노 엑스포, 먹거리정책의 시작』, 지역재단.
- 황영모. (2015), 『푸드플랜시대, 지역단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실천과제』, 전북연구원.
- FAO. (2006), Food Security, *Policy Brief*, Issue 2. (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faoitally/documents/pdf/pdf_Food_Security_Cocept_Note.pdf)
- CESCR. (1999), “No, CESCR General Comment.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Art. 11) Adopted at the Twentie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12th May, 1999. Geneva.
- The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FSIN)(2021),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2021*.
- World Economy Forum. (2022). 「The Global Risks Report 2022」.